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 중앙 공약 |

내 삶을 디자인 하다

대한민국을 재설계
미래로 재도약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희망을
피우겠습니다."

"혁신적 정책으로 희망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좌절하고 있는 국민이 다시 뛸 수 있는 '희망 디자인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재설계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불안하며, 경제는 규제에 묶여 있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과 경제도 위기입니다.
일대 혁신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과거에 갇혀 위기 속에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경제부터 살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빼앗긴 우리의 자유와 희망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희망의 경제'로 변화시켜 대한민국 '희망의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한 제1의 혁신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제도와 관행의 철폐입니다.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께 희망과 기회가 넘치게 하겠습니다.
혁신적 정책으로 희망을 디자인하겠습니다.

미래로 재도약

미래통합당이 국민과 함께 꿈꾸는 내일은 국민이 당당한 대한민국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함께 행복한 나라, 경제현장에 활기가 넘치고 일자리가 풍족한 나라, 감염병과 사건 ·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안보를 튼튼히 하고 미래의 산업을 이끄는 힘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다시 한 번 미래로 재도약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국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0년 3월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 **김재원**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공약발표 라이브 현장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래 QR코드로 접속하시면, 공약발표 오른소리 영상 또는 보도자료로 연결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공약(1.9 발표)

희망경제 공약(1.15 발표)

주택 공약(1.16 발표)

교육 공약(1.17 발표)

소상공인 공약(1.20 발표)

반려동물 공약(1.21 발표)

검찰개혁 공약(1.29 발표)



여성안전 공약(2.3 발표)

규제개혁 공약(2.4 발표)

보건안전 공약(2.5 발표)

국민안전 공약(2.6 발표)

우한코로나19 대응 안심보육 공약(2.9 발표)

외교안보통일 공약(2.10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 (2.11 발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공약발표 라이브 현장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래 QR코드로 접속하시면, 공약발표 오른소리 영상 또는 보도자료로 연결됩니다.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공약(2.12 발표)

문화예술체육 공약(2.13 발표)

따뜻한 동행 공약(2.27 발표)

보훈 공약(2.28 발표)

국방 공약(2.17 발표)

농어업 공약(2.18 발표)

아파트 공약(3.2 발표)

코리아포비아 극복 공약 (3.3 발표)

진심복지 공약(2.19 발표)

어르신 청춘 7대 공약 (2.20 발표)

미세먼지 대책 공약(3.4 발표)

벤처 공약(3.5 발표)

청년 공약(2.26 발표)



스포츠 기살리기 5대 공약 (3.11 발표)

마스크 대책 공약 (3.24 발표)

공약집 사용설명서

중앙 공약



대분류

소분류

색인 키워드

공약 슬로건

공약이 필요한 현실

공약 제목

공약 주요내용

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사항
(제) : 법 제정
(개) : 법 개정

공정 재설계 적폐 재도약 | 불공정 개혁

#검찰
#개혁
#공수처폐지

01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하겠습니다

현재

- 지난 '조국 사태', '검찰 인사 학살'을 통해 국민들은 권력이 검찰 수사에 어떻게 개입하고 방해하는 지에 대해 똑똑히 목격하였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검찰수사의 '민주적 통제'라는 초법적 발상을 운운하며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인사와 예산을 하고 있는 현 제도를 이용해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있음

약속

공수처 폐지 등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 위헌적 공수처 폐지
- 검찰청 인사 및 예산 독립
  -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위해 검찰 인사위원회 독립 및 구성 다양화
  -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게 예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도록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
- 검찰 총장 임기 6년으로 연장
  -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이 소신있게 수사 할 수 있도록 함
- 「공수처폐지법(제)」, 「정부조직법(개)」, 「검찰청법(개)」

시도 공약



공약 제목

공약이 필요한 현실

공약 주요내용

1 미래전략산업 육성, 대기업 유치,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로 부산 경제의 재도약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살려 지역상권을 일으키고,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등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산업구조를 넘어,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고부가가치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약속

-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유치 노력을 위한 '범시민 부산기업유치 특위' 구성
-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지역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추진
-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 항공부품 MRO 단지 조성 및 R&D 허브센터 구축
- 스마트 모빌리티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
- 첨단지능 기계부품 산업단지 구축
- 고부가가치 첨단 선박 재제조 산업단지 조성
- 4차 산업혁명 선도 거점도시 구축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경제 활성화

기업 경영의 자유 확대하는 공정한 시장 조성 029
법인세 인하 030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031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032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033
국적선사 적취율 향상과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 034
관광청 신설 035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재정 운영 036

규제개혁

과감한 규제혁파와 과잉의원입법 방지 039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 해결방안 마련 040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편 041
유연근로제 확대 042
방송사 지배구조 규제완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043

국민부담 경감

미래세대 세금폭탄 방지 045
부녀자 · 자녀 · 어르신 세금 공제 혜택 대폭 확대 046
혼인 · 이사 · 장례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 도입 047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048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 049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050
단말기호갱방지법 도입 051

금융제도 개선

공매도 규제 강화 053
금융 규제 개혁 054
불합리한 개인투자 금융세제 개선 055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056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057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4차 산업혁명

벤처기업 규제환경 개선 059
패자부활 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 060
벤처 교육 강화 061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 인재 육성 062
벤처 전용 업무공간 마련 063
벤처기업 투자제도 지원으로 스케일업 촉진 064
고효율 에너지믹스 통한 미세먼지 절감 065
히든 챔피언 기업 500개 육성 066
4차 산업 일자리특별법으로 일자리 100만개 창출 067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 지원 068
문화콘텐츠 맞춤형 지원 069
과학기술인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070

자영업자 ·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073
우한코로나19 경제적 대책 마련 074

지역균형발전

지방도시 실질적 지원 확대 077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 078
지자체 자율적 자치권 확대 079
지방자치 주민 참여 활성화 080
지역여행 활성화로 지역균형 발전 추진 081
지역별 문화체육 콤플렉스 도입 082
이장 · 통장 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083

살맛나는 농어촌

농어민 · 서민 소득증대 위한 세금 절감 085
'(가칭) 농어업인 연금제' 실시 086
가축 전염병 방역 · 축산물 안전체계 구축 087
농산물 가격 하락 · 자연재해의 국가 책임 강화 088
농어촌 생활복지 확대 089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 확대 090
수산직불제 개편과 TAC 내실화 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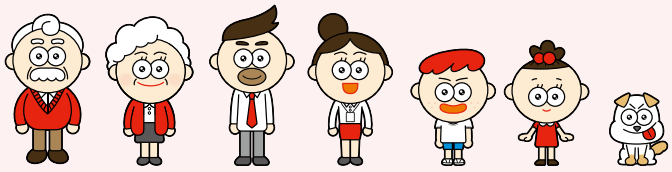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불공정 개혁

공수처 폐지 등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099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100
자의적 공권력 남용 방지 101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 102
태양광게이트 비리규명 및 척결 103
공영방송 정상화 1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뉴미디어위원회 신설 105
문화예술계 · 체육계 공정질서 확립 106
지방체육계 정치화 방지 107
준연동형 선거제 폐기 108

공정교육

'조국방지법' 마련 111
학교 정치화 방지 112
자사고 · 외고 · 국제고 존치, 일반고 경쟁력 강화 113
교육감–시 · 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114
전교조 중심의 교장공모제 폐지 115
선생님 교권 강화 116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117
초등돌봄교실 시간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118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생활 안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 127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 128
경찰 ·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대폭 인상 129
소방장비 예산 2배 확대 130
권역외상센터 · 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 131
안전 대한민국 시스템 마련 132
미세먼지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 133
미세먼지 국제공조로 근본 대책 마련 134
정부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미세먼지 대책 135
미래 꿈나무들에게 미세먼지 안심 환경 조성 136
국산 농축산물 신뢰 강화 137

한반도 진짜 평화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139
북한 비핵화 주도 140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141
북한 눈치 보기 정책 폐기 142
남북협력기금 국민통제 강화 143
북핵 폐기 전제로 남북교류협력계획 수립 144
분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아픔 치유 145
북핵 · 미사일 군사대응태세 구축 146
북핵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47
9 · 19 남북군사합의 폐기 148

책임 국방

군인 정년 연장과 현역 장병 복무 여건 개선 151
예비군 훈련 수당 인상 및 전역군인 재취업 지원 강화 152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153
영예로운 국가 책임 보훈 실천 154

든든한 외교

재외국민 권익 신장 적극 추진 157
공공외교 지원 강화 158
적극적인 외교로 코리아포비아 극복 및 재외국민 보호 159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우리 가족 행복

국가 재난에도 든든한 안심 보육 조성 167
어린이집 급식비 2배 인상 168
어린이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 환경 개선 169
실종아동 제로사회 만들기 170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171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172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상향하여 교통비 지원 173
반려인 · 반려동물 지원 확대 174
양육비 불이행 국가 책임 강화 176

청년 희망 약속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179
민간 청년 일자리 확대 180
청년 벤처생태계 조성 181
청년 농업인력 양성 182
청년 · 신인 예술인 문화마켓 조성 183
청년 문화패스 신설 184

여성 안심 약속

여성범죄 안전망 확충 187
여성 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마련 188
경력단절여성 예방 사업 지원 확대 189
여성일자리 새일센터 개선 190

어르신 든든 약속

민간형 노인일자리 두배 확대 193
국민연금 개혁 방안 마련 194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195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 스마트 밴드 보급 196
어르신 골다공증 무료검사 실시 197
‘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 신설 198
‘(가칭)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 신설 199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우리 이웃 배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201
필수적 장애인 지원제도 개선 202
「왼손잡이기본법」 제정 204
근로형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205
사회복지예산 확대 및 사회복지사 급여 현실화 206

내 집 마련

3기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 209
재건축 · 재개발 규제완화로 양질의 주택공급 대폭 확대 210
용적률 확대 등 구도심 종합개발 추진 212
출 · 퇴근시간 교통 혼잡 개선 213
1인가구 · 청년 ·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마련 214
서민 · 중산층 내 집 마련 제도 지원 216
약탈적 부동산 증세 저지 217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로 관리비 비리 근절 218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책 마련 219

스포츠 활성화

생존수영 교육 강화 221
은퇴선수를 지원하여 스포츠 지도자 양성 222
체육 국가대표 지원 현실화 223
스포츠 종목 실업팀 발전 224
체육 꿈나무 해외국비유학 지원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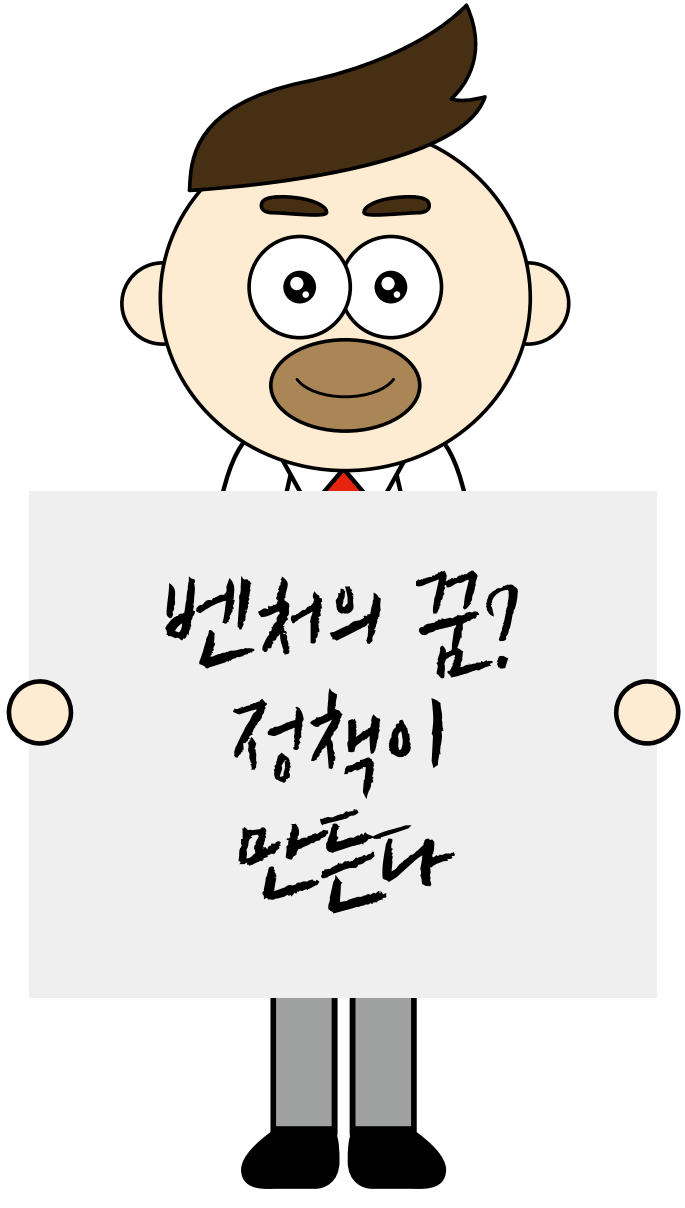
튼튼 건강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227
감염병 안심사회 조성 228
독감 등 국가예방접종 대폭 확대 230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231
간호사 처우 개선하여 국민건강증진 232
흡연부스 환경개선 및 간접흡연 제로 추진 234
폐질환 발견 · 치료 국가지원 확대 235

01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우리는 희망의 피켓을 듭니다
미래 피켓



대한민국에도 성공한 청년벤처기업이 나올까요?

스타트업의 꿈, 정책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벤처기업의 성공이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규제 공화국입니다. 기술과 열정이 있어도 각종 규제에 막혀서 벤처기업을 시작하기도 버겁습니다. 운이 좋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 52시간' 밖에 일할 수 없다니요…. 또 노력했지만 경험부족으로 벤처에 성공하지 못한 '성실실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조차 없습니다. 벤처기업인은 오늘도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합니다. 벤처기업의 성공은 지금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한민국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에 벤처기업이 걸음마를 떼고 세계 시장을 향해 뛸 수 있게 하는 공약을 요청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벤처창업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희망은 '벤처창업가' 입니다



민심과 미래통합당이 만들어가는 정책개혁 프로젝트

벤처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해도 현실은 갑갑합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친노동·반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기업 투자 감소, 고용 둔화, 소비 위축 등으로 국내의 벤처기업 생태계는 극도로 침체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벤처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환경을 바꿔 성실실패 시 정부의 금융·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4전5기'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근무·고용 환경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가 정신을 혁신하여 글로벌 벤처투사를 양성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인재를 육성하며,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 하는 정책을 통해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기업 경영의 자유 확대하는 공정한 시장 조성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적선사 적취율 향상과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
◆관광청 신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재정 운영

#공정거래
#독점금지
#규제개혁
#공정거래위원회

01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현행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은 독점금지는 부차적인 목적이며, 기업의 규모 및 경제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 사전적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에서 사후 규제 및 경쟁촉진 정책으로 전환하여 기업활동에 활력 촉진 필요

약속

기업 경영의 자유 확대하는 공정한 시장 조성

▶ **공정거래법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자산총액 기준 : 직전년도 GDP의 0.5%로 법률에 정함)
–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기준 개선
– 지주회사 규제 개선(지분율 규제 완화, 금융·보험사 보유 허용,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허용 등)
– 공정위 법집행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불합리한 형벌 규정 정비

▶ **고의적·반사회적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위한 법집행 강화**
– 기술 및 인력탈취 등 중소기업이 달성한 혁신을 탈취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폭 강화

▶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개)」, 「하도급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경제 활성화

#경제 #법인세 #투자 #일자리 #조세제도

02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현재

▶ 세계 주요국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 유수 기업 유치를 위하여 법인세 인하 경쟁 중. 문재인 정권 들어 우리나라만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법인세를 인상

▶ 글로벌 기준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독려

약속

법인세 인하

▶ 현행 4단계의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을 2~5%p 인하
– 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최저한 세율 조정
– 과표구간별 2%p 인하,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유지

▶ 「법인세법(개)」, 「조세특례제한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경제 #조세제도 #가업승계

03 기업 승계 가로막는 수탈적 상속증여세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 가업 상속을 주식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세율은 OECD 국가 평균세율보다 4배 이상 높은 세계 최고 수준, 창업세대들이 기업 승계를 포기한 채 매각 또는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투자·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조세 정책을 정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추세에 맞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약속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 상속증여세제를 국제 추세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인하
–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폐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율 인하 등

▶ 「상속및증여세법(개)」, 「조세특례지원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경제 활성화

#국가재정 #경제 #예산 #투자 #일자리 #세제자원

04 기업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고용과 소득 감소는 물론 경제성장률까지 떨어지고 있음
- 2019년 전산업생산 증가율은 0.4%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9%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
- 설비투자 역시 7.6%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
- 작년 GDP성장률은 2%에 겨우 턱걸이 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 기록

약속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대 3% : 중견 5% : 중소 10%)
-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경제 활성화

#경제 #일자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05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현재

▶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보다 2배 가량 높음에도 불합리한 규제와 낮은 생산성으로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
-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7대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약속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7+1(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 물류+공유경제)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 규제 혁파 및 융합 촉진,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등 적극 노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경제 활성화

#경제
#해운업
#해양진흥공사

06 글로벌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현재

▶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 통해 우리 화물을 우리 선박으로 수송하는 비중인 국적선사 적취율 향상 필요**
–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컨테이너 적취율은 45%, 전략물자는 58%에 불과한 실정

▶ **우리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인 친환경 고효율 대형선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충 필요**

▶ **승선근무예비역이 2026년부터 현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되어 우려 제기**
–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군수품과 전략물자, 병력을 수송하는 제4군 역할과 해운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력

약속

국적선사 적취율 향상과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

▶ **적취율 향상 대책 마련**
– 우수선화주 인증제에 대한 혜택 및 공제 확대
– 약 45,000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적취율 목표 70% 추진

▶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5→10조원)과 선박금융 지원 강화**

▶ **선주와 화주간 공정한 해운시장 환경 조성**

▶ **친환경선박 대체 건조 및 신조지원 사업 지속 추진**

▶ **S&LB 지원 확대 통해 선사의 유동성공급 지원 추진**
–S&LB(sale and leaseback)는 자기소유의 설비 등을 매각하면서 구입자로부터 그 설비 등을 빌려 받는 사업

▶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유지**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경제 활성화

#경제
#관광업
#관광청
#지역관광

07 관광청 신설로 지역 관광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현재

▶ **관광 관련 행정 기능이 10여 개 부처에 분산·관리되고 있어 체계적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산업 유관기관 간의 협력 어려움**

▶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정부 차원의 관광청을 운영해 관광산업의 체계적 전략을 수립, 경제 활성화 도모 필요**
– 일본,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유럽과 동남아 다수 국가 등

약속

관광청 신설

▶ **'관광청 신설'로 국내 관광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관광산업 관련 다양한 규제, 지원 체제 일원화로 관광 혁신 전략의 체계적 시행

▶ **'한류문화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광거점도시'와 연계
– K-POP 전문 공연장 조성, 음식, 역사 등 지역 연계를 통해 '한류문화로드' 구축

▶ **'웰니스 관광 단지'를 통해 국내 관광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지원**
– 건강, 치유, 휴양, 미용, 관광을 결합한 개별 시설 중심의 '웰니스 관광'을 지역별 자연환경, 특산품과 연계한 관광단지로 조성

▶ **「관광산업발전특별법(제)」**



08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재정 운영으로 국가 미래와 국민부담 절감을 최우선 하겠습니다

#국가재정
#경제
#예산
#예비타당성조사

현재

▶ 문재인 정권 출범 후 2년간(2017～2018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외 사업 무려 12건(박근혜 정부 4년간 예타제외 사업 5건)이며, 2019년에는 24조원 넘는 SOC사업의 예타면제 추진

▶ 2019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적자 4조원에 달하며, 차기정부(2022～2026년)가 떠안을 국고부담 25조원으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재정전망」

▶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은 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체결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를 한정하고 있으나, 제한 규정이 없어 예외적 사항에 한정해야 할 수의계약이 만연해짐에 따라 관급계약의 공정성을 저해

약속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재정 운영

▶ **정권 입맛에 맞는 임의적 예타면제 금지**
– 「국가재정법」 제38조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조항 강화

▶ **국민 노후 불안하게 하는 4대 공적연금 장기추계 의무화**
–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실시 및 대국민 보고 의무화
– 4대 공적연금 장기추계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 **관급계약 공정성 확보 위한 '수의계약 총액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체결 시 투명성 강화 및 공정한 계약 기회 제공으로 지방재정 투명화 강구
※일부 지자체에서 수의계약 총액제 실시 중

▶ **예산낭비 문란 관련 책임자 처벌**
– 「국가재정법」 내 처벌규정 신설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

▶ **「국가재정법(개)」**



규제개혁

◆과감한 규제혁파와 과잉의원입법 방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 해결방안 마련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방송사 지배구조 규제완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제
#규제개혁
#행정규제

01 과감한 규제혁파로 신바람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 김대중 정부의 "규제 기요틴(단두대)",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및 가시", 문재인 정권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앞세우며 강력한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적 체감도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임
- 특히,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배출구가 돼버린 의원입법에 대해 '여과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규제비용관리제의 활성화와 규제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장치 마련 필요

약속

과감한 규제혁파와 과잉의원입법 방지

- **현재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된 총리 직속 장관급 규제개혁기구 신설**
  - 독립적인 사무처 설치, 직무감찰 요구권을 부여해 각 부처에 책임있게 규제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대폭 강화
- **중요 규제 중심으로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One in, two out') 하는 등 규제비용과 규제 건수를 연계하여 규제 개혁의 실행력 제고**
- **규제정보 포털 개선**
  - 국민이 규제가 증가하는 것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부처별 규제 현황 공개 확대
- **중요 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출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등 규제 관리 강화**
- **「행정규제기본법(개)」, 「국회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규제개혁

#규제개혁 #원전 #파이로프로세싱

02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재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 사용 후 핵연료 매설비율이 포화상태. 부산 기장 고리 1~4호기 저장률 91.82%, 전남 영광 한울원전 1~6호기 80.17%인데 정부·여당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정책에만 집중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후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 원자력발전 후 남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여 다시 원자력발전의 핵연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추진하다 문재인 정권에서 중단

약속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 해결방안 마련

▶ **파이로 프로세싱 재논의 추진**
– 문재인 정권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내 중단 된 파이로 프로세싱 논의 재개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방안 마련**
– 4세대 원자로 기술연구 개발 : 고준위 방폐물이 생기지 않는 고속로와 고온가스로, 토륨원자로 등 재처리가 불필요한 차세대 원자로 연구

▶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성화**
– 2013년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민간)와 협력하여 사용 후 핵연료 활용 국민여론 환기

▶ 「방사성폐기물관리법(개)」, 「고준위방폐물관리절차에관한법률(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규제개혁

#규제개혁 #경제 #최저임금

03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3년 사이 30.2% 인상)으로 인해 쪼개기 알바 급증 및 일자리 감소

▶ 국내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인건비 폭탄으로 부담 가중
– 2019년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7.6%가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고, 소상공인 사업체 10곳 중 6곳이 직원 수 감축

▶ 현재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근로자 기준으로, 실제 현장 상황과 괴리 존재

약속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편

▶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 '물가상승률' 포함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 숙식제공 등 부대비용 포함

▶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현행 1년 → 2년)

▶ 개별 근로자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유급휴일 무급 가능

▶ 월급여를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휴시간 제외

▶ 「최저임금법(개)」, 「근로기준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규제개혁

#규제개혁 #경제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

04 탄력근로제 등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권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과 경직적인 근로시간 법제도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많은 혼란과 어려움 초래
- 기업 경영의 어려움 해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도입 요건 완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 필요

약속

유연근로제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 단위기간 확대 :
    (현행)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 ⇒ (개선) 1년
  - 도입요건 완화 :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개선) 해당 직무 근로자대표 협의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 정산기간 확대 :
    (현행) 1개월 ⇒ (개선) 3개월
  - 도입요건 완화 :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개선) 개별근로자 동의
-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확대 개선**
-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제도(고소득자의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 **「근로기준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규제개혁

#방송 #규제개혁

05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재

- 최근 IPTV 플랫폼의 비약적 성장, 종합편성 PP의 시장 안착과 대비되어 지상파 방송의 성장은 정체된 상황
- 현재 시행 중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 지분 소유와 동종사업자 간 겸영을 제한하는 규제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폐지되거나 최소화되는 추세

약속

방송사 지배구조 규제완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정부, 노조가 주인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사로 정상화**
  - 1인 지분 제한을 40% → 49%
    대기업 소유 지분 제한을 10% → 30%로 완화
  - 또는 대기업 범위를 방송에 한하여 자산총액 10조원 → 20조원 기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 도입
- **방송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유 경영 규제 획기적 완화**
  - 충분한 투자확보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으로 방송 산업의 발전 도모
- **「방송법(개)」**

국민부담 경감

◆미래세대 세금폭탄 방지

◆부녀자 · 자녀 · 어르신 세금 공제 혜택 대폭 확대

◆혼인 · 이사 · 장례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 도입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단말기호갱방지법 도입

#조세제도
#국가재정

01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하여 자녀세대로의 세금폭탄을 막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한 총지출 증가율이 3년간 지속되고 있고,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도 빠른 속도로 악화

– 2020년 적자국채 규모는 60조원에 달하며,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 상회 예상

▶ 재정총량의 실효적 관리 문제,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범정부적이고 체계적 ·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추진 필요

약속

미래세대 세금폭탄 방지

▶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

– 채무준칙 :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40% 이하 유지

– 수지준칙 :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 2% 이하 유지

– 수입준칙 : 국세감면율 직전 3년 평균 + 0.5%

▶ 채무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 분산되어 추계되는 사회보험 재정전망 체계를 장기재정 전망의 틀에서 일원화, 의원발의 입법안에도 Pay-Go 제도 적용

▶ 「재정건전화법(제)」, 「국가재정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국민부담 경감

#조세제도 #연말정산 #어린이 #어르신 #가계부담완화

02 부녀자·자녀·어르신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만7세 미만 아동에게는 1명당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취학 이후에는 자녀당 연간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 불과

▶ 어르신과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부족

▶ 정부가 사적보험을 통해 돌려받은 의료비를 차감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불만이 큰 상황

약속

부녀자 · 자녀 · 어르신 세금 공제 혜택 대폭 확대

▶ **부녀자, 7세 이상 자녀, 어르신 부양에 대한 공제 확대**
- 부녀자 공제 대상 확대(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및 공제금액 인상(연 50만원 → 100만원)
- 자녀세액공제 2배 인상(인당 15만원 → 30만원)
- 경로우대공제 상향 조정(연 100만원 → 150만원)

▶ **연말정산 실손보험 공제제도 개선**
- 개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받은 혜택을 세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만큼 사적 보험인 실손보험을 통해 충당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차감되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소득세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국민부담 경감

#조세제도 #연말정산 #가계부담완화

03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 **서민, 중산층 가계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반해 혼인 · 이사 · 장례비용이 상승하여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전국 평균 결혼식 비용은 1617만원으로 부모가 자녀보다 평균 2배 가량 더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남
- 장례비용은 평균 1200~1600만원 수준이며, 이사 비용도 100~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약속

혼인 · 이사 · 장례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 도입

▶ **혼인, 이사, 장례비용의 경우, 각 100만원 한도로 실제 지출비용의 15%를 세액공제**

▶ **「소득세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국민부담 경감

#조세제도
#기부
#연말정산

04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 가계의 경제 사정 악화와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
- 2018년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25.6%로 2011년 36.4%에 비해 10.8%p 감소
- 지난 1년간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도 16.4%로 2013년 19.9% 이후 꾸준히 감소

▶ 주변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세제혜택은 적은 편으로 1만 달러를 기부했을 때, 받는 세제혜택은 약 1500달러 수준에 불과
- 반면, 싱가포르는 6000달러, 일본 5000달러, 독일 · 영국 · 중국 등은 4500달러 수준임

약속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고액기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
-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30% → 40%)
  ※ 1천만원 이하 15% 유지

▶ 「소득세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국민부담 경감

#조세제도
#부동산

05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낮추고, 거래 숨통은 틔우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 급등과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세로 세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음. 올 1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1216만원으로 이미 12.16 대책의 고가주택 기준선인 9억원을 돌파했음

▶ 다주택자 역시 세금 폭탄으로 인해 집을 보유할 수도 팔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증여가 아닌 보유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음

약속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

▶ 문재인 정권이 급격히 올린 보유세 조정
- 주택가격 상승률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의 경우 9억원→12억원) 상향
- 시행령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부의 세금 편법 인상 원천 차단
- 문재인 정권이 300%로 인상하려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환원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국민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
#자영업자
#실업자
#은퇴자
#가계부담완화

06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 낮추겠습니다

현재

▶ **같은 집, 같은 자동차를 가졌어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 실업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속되고 있음**

– 소득 파악율이 80%를 넘어선 상황
–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
–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2022년 7월 정권 후반부에나 2단계 실시를 계획하는 등 그 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

약속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

–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청·장년 실업자, 은퇴한 부모세대에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

▶ **건강보험 기금화 실시**

– 4대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국회가 따져보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방지

▶ **「국민건강보험법(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 「국가재정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국민부담 경감

#통신비
#연말정산
#가계부담완화

07 단말기호갱방지법을 도입하여 통신비 거품을 빼겠습니다

현재

▶ **현재 핸드폰 유통구조는 SK·KT·LGU+ 등 이동통신사가 삼성·LG·애플 등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대규모 매입 후 단말기에 통신서비스를 붙여 소비자에게 팔면서 가격 거품이 생긴다는 지적**

– 통신사는 요금/서비스 경쟁보다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집중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폐해가 발생

약속

단말기호갱방지법 도입

▶ **통신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강한 요금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가제 폐지 등 요금 규제를 철폐
– 제조사와 통신사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스마트폰의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 **유무선 전화·인터넷 통신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

▶ **「전기통신사업법(개)」**

금융제도 개선

◆공매도 규제 강화

◆금융 규제 개혁

◆불합리한 개인투자 금융세제 개선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금융제도 개선

#경제 #주식 #공매도규제 #투자

01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잡겠습니다

현재

▶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기성이 짙은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 시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큰 손에 의한 시장 조작 우려가 높아짐**

– (2019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은 공매도 거래대금 중 외국인 투자자(63%), 개인 투자자(1%)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에 전형적인 외국인 놀이터로 전락,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요구도 커진 상황

– 특히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등 자본이 큰 세력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와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경제에 막대한 폐해 야기

약속

공매도 규제 강화

▶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법적 통제 강화**

▶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형사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
(시장교란행위 위반행위 수준 : 5억원 이하 또는 이득액의 1.5배 이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금융제도 개선

#규제개혁 #경제 #금융 #인터넷은행 #은행

02 낡은 금융 규제 개혁하여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현재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ICT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임

▶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 종료를 기점으로 위원회가 법령정비를 관련 행정기관에 권고하거나 중앙부처가 안전성 등 법령 정비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개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

약속

금융 규제 개혁

▶ 혁신적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개혁
-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

▶ 금융혁신지원법 보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끝난 이후 법령 정비기간 동안 특례기간 2년간 자동 연장

▶ 「인터넷전문은행법(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금융제도 개선

#조세제도 #주식 #투자 #증권거래세

03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증권거래세는 유지되면서 양도세 과세대상은 급속히 확대되어 개인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종목별 3억원)는 물론, 과세대상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됨에 따라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어도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부모·자식간 투자현황까지 서로 공유해야 하는 상황
- 매년 연말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매도가 집중되어 주식시장의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있으며,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손실이 났어도 세금을 내는 상황
- 증권거래세와 양도세의 이중과세도 문제

약속

불합리한 개인투자 금융세제 개선

▶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세제 개선
-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 합리적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 도입을 통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
-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 가계자금의 금융시장으로의 투자 유인

▶ 「증권거래세폐지법률안」, 「소득세법(개)」, 「농어촌특별세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금융제도 개선

#경제 #은행 #금융소비자보호

04 예금보호한도 상향하여 금융 안전망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현재

▶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

–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감안해 지난 2001년 정한 기준

– 그 사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명목)은 지난 2017년 기준 1492만원에서 3669만원으로 약 2.5배 증가, 1인당 국민소득(명목)은 1만 1484달러에서 3만 3433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

– 경제 규모가 성장했음에도 예금자보호한도는 여전히 5000만원에 머물러 있어 기관별로 분산해야 하는 등 금융스트레스 가중

약속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

– 현행 5천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예금자보호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금융제도 개선

#소상공인 #자영업 #조세제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05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2020년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겠습니다

현재

▶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임**

–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 할 필요

약속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를 통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조세특례제한법(개)」**

4차 산업혁명

- ◆벤처기업 규제환경 개선
- ◆패자부활 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
- ◆벤처 교육 강화
-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 인재 육성
- ◆벤처 전용 업무공간 마련
- ◆벤처기업 투자제도 지원으로 스케일업 촉진
- ◆고효율 에너지믹스 통한 미세먼지 절감
- ◆히든 챔피언 기업 500개 육성
- ◆4차 산업 일자리특별법으로 일자리 100만개 창출
-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 지원
- ◆문화콘텐츠 맞춤형 지원
- ◆과학기술인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4차산업혁명 #벤처기업 #규제개혁 #창업 #근로시간

01 벤처기업의 혁신적 시도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환경을 바꾸겠습니다

현재

▶ 세계가 4차 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기존의 주력산업 중심의 법, 제도, 정치 질서가 견고하여 비물질적 문화가 기술발전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뒤처지는 상황

▶ 경직된 벤처생태계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되어 신산업 출현이 매우 어렵고, 상업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아이디어 고사

약속

벤처기업 규제환경 개선

▶ 벤처기업 특수성 고려한 근로환경 보장
-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1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 벤처기업 주 52시간 적용 예외 인정 추진

▶ 「산업융합촉진법(개)」, 「규제자유특구법(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개)」, 「근로기준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4차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벤처기업 #창업 #재도전

02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벤처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 벤처기업은 기술이 당장 없어도 글로벌 네트워크 관계에 의해 기술 조달이 가능하고, 아이디어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좋은 성장아이템으로 발전. 이 과정들은 수많은 실패를 용인해주고 쉬운 재도전 환경을 조성해줄 때 가능

▶ 중소벤처기업인의 다각적인 재도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의 창업 기피와 재도전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 창업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필요한 상황

약속

패자부활 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

▶ **창업 재도전 벤처생태계 조성**
- 재도전 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자 공제제도 확대
- 재도전 지원을 위한 연관 법안 제정
- 정부 지원기관 정비 및 지원조건 완화로 재도전 지원창구 일원화

▶ **「창업 재도전 지원 위원회」 신설**
- 창업 성실 실패 시 정부의 금융·보증 지원 확대, 신용회복·창업 자금 지원, 멘토링, 기술인력 매칭 등 전담 역할 수행

▶ **「재도전지원확대를위한특별법(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4차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벤처기업 #창업 #교육

03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여 글로벌 벤처투사를 양성하겠습니다

현재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 활용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이 무장된 인재양성 필요

▶ 2006년 유럽연합은 '오슬로 아젠다'에 따라 '교육을 통한 기업가 정신의 함양' 권유, 세계경제포럼도 2009년 모든 국가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의무화할 것 권고. 우리나라도 중등과정 이상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무 아님

약속

벤처 교육 강화

▶ **초등 교육과정에 기업가 정신 교육 신설 및 중고등 교육과정 의무화**
- 교과과정에 SW·HW 및 창의수업 강화

▶ **기업가 정신 육성을 위한 연관 전문교육교사 양성**

▶ **예비창업자, 경력단절, 재취업자, 시니어까지 포괄하는 창업교육 과정 강화**
- 창업교육 과정에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관 예산 확보

▶ **기존 유사 교육센터 연계 통합체계 구축**
-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기업센터, 시니어 창업지원센터, 창업대학원 등 창업혁신 생태계 센터 재설계

▶ **「초중등교육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4차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규제개혁

04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 현재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CVC) 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 투자와 M&A를 하는 것은 금산분리 규제에 막혀 현실적으로 불가능

약속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 인재 육성

▶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 기업과 대학이 긴밀히 협업하는 '민간 중심의 벤처 · 스타트업 육성 타운' 공급하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쉽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파트너스 센터', '4차 산업분야 벤처 캠퍼스' 조성

▶ 블록체인(5천억원), 소프트웨어 인재 펀드(3천억원) 조성을 벤처 인재 육성
– 상장 준비기업, 해외 진출 기업 등을 위한 펀드 지원 확대

▶ 「공정거래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4차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벤처기업 #창업

05 기업 특성에 맞춘 벤처 전용 업무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 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의 역할이 모호하고 조성 목적이 유사하여 차별화 부족. 기존 산업단지와 중복 지정 문제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입지 선택의 혼선 초래

▶ 주요 지원기반시설 및 문화여가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접근성 · 기능성이 떨어지고 기업 간 소통 및 교류 결여로 인하여 창업생태계 구축의 구조적 문제 존재. 벤처기업들이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상호 간의 협업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자생적 협업 시스템도 부재

약속

벤처 전용 업무공간 마련

▶ 민간 중심의 벤처 · 스타트업 육성 타운 공급
– 선도 벤처기업 중심의 협업 가능한 복합 비즈니스 공간 지원

▶ 글로벌 파트너스 센터 조성
– 벤처 ·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 체계적 지원
(해외 거주 한인 벤처 네트워크, 해외 바이어 · 투자자 등이 사용 가능한 공간 제공)

▶ 4차 산업 벤처캠퍼스 조성
– 창업지원주택, 복합문화시설, 우수인재 공급 등 교육 + 문화 + 서비스가 공존하는 종합 공동캠퍼스 추진

▶ 「중소기업창원지원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4차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벤처기업 #엔젤투자 #규제개혁

06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대다수 벤처기업이 인재 유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
–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스톡옵션 활용도는 규제 등으로 2000년대 초반보다 후퇴

약속

벤처기업 투자제도 지원으로 스케일업 촉진

▶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연간 주식매입가격 기준 1억원까지 비과세 하고, 1억 초과 스톡옵션의 경우 금액별로 차등감세

▶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3년 더 연장,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적격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기업당 투자 한도: 1000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 2000만원)를 연간 총소득 기준도 연계
– 투자손실을 감내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투자 확대 유도

▶ 「조세특례제한법(개)」, 「자본시장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4차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친환경 #탈원전정책폐기 #미세먼지 #원전

07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고효율 에너지믹스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현재

▶ 국가에너지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없이, 4계절 맘껏 쓰고, 기업은 값싼 전기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경제성'과 함께 국민건강 해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성' 확보임

▶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발전 비용은 더 들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약속

고효율 에너지믹스 통한 미세먼지 절감

▶ 원전 가동률 합리적 제고

▶ 친환경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추진
– 경제성, 환경성, 간헐성 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R&D 예산 확보 및 연관 법안 발의

▶ 「에너지법(개)」, 「전기사업법(개)」,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4차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히든챔피언 #벤처기업 #창업

08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 500개'를 발굴하겠습니다

현재

▶ 우리나라는 관련법(전파법 등) 규제로 인해 드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연구개발이 부족한 상황
- AI분야 역시 미래유망 분야인 AI과학자를 국가적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연구·개발의 뒷받침이 필요

▶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의 핵심인 OTT, AI, 빅데이터, 드론 분야를 혁신성장 동력으로 확보 필요
- 관련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발굴과 지원이 절실

약속

히든 챔피언 기업 500개 육성

▶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 (OTT, AI, 빅데이터, 드론분야) 500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
- 전 세계 히든 챔피언 기업 수 : 독일 1300개, 미국 344개, 일본 220개, 호주 116개, 스웨덴 110개

▶ 「(가칭) 히든챔피언발굴및육성에관한법률(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4차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벤처기업 #일자리 #창업

09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 통해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 만들어내겠습니다

현재

▶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대립하면서 규제에 가로막혀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고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배달 플랫폼, 영상 OTT 분야에서 국내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신세

▶ 기존사업 VS 신규사업의 일자리전쟁이 아닌 기존사업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고, 대한민국 전 분야에 걸쳐 IT 중심의 일자리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 뒷받침 필요

약속

4차 산업 일자리특별법으로 일자리 100만개 창출

▶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법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 전 분야에 ICT를 도입

▶ 4차산업일자리특별법 발의

▶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설치 및 당 차원 4차산업일자리혁명 기구 설치

▶ 당 상임위별 4차산업일자리 담당 국회의원 배치

▶ 「4차산업일자리특별법(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4차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벤처기업 #ICT #청년

10 ICT 종사자를 보호·육성하도록 '청년스타트업공제회'를 신설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 전 세계 ICT 발전 최상국의 이면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밤에 불을 밝히며 배를 굶주리고 잠을 설쳐가며 노력한 약 90만명의 ICT, 스타트업 종사자들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

▶ 현재 ICT,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처우, 복지,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필요

약속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 지원

▶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현업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근로상담, 복지지원, 노후지원을 위해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 설립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육성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4차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문화 #영상 #영화 #콘텐츠

11 한국영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문화콘텐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제조업과 달리 문화콘텐츠가 수출될 경우 국제적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어 국가별로 원천징수(10%～15%)됨
- 기획부터 상영(방영)까지 다년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다수의 제작, 배급회사가 참여하는 영상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외국납부세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큼

▶ 문화콘텐츠산업의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의 경우, 연구소에 등록된 한정된 인원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상콘텐츠 산업 제작활동은 야외 로케이션, 스튜디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지 못함

약속

문화콘텐츠 맞춤형 지원

▶ 제조업에 비해 문화콘텐츠 산업이 수출할수록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 현행 제조업에 맞춰져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문화콘텐츠 산업에도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의 R&D 세액공제와 유사한 형태의 공제제도를 마련해 사전기획에 대한 투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4차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과학기술

12 과학기술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현재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과학기술인의 연구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과학기술인연금 등 시행 중이나 연구 성과를 반영 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요구가 있음

약속

과학기술인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 연구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성과급 형태를 지급하거나, 연금에 반영할 수 있는 포인트제 도입

▶ 「과학기술인공제회법(개)」

내 삶을 디자인하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우한코로나19 경제적 대책 마련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
#고용보험

01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늘리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생계위기 커지고 폐업률 급상승

▶ 2018년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증가율 0.2%로 전체 가계 평균소득 증가율(2.1%)보다 크게 밑돌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영업자 소득 감소

▶ 자영업자 가계 평균부채는 18년보다 3.8% 늘어난 1억 1,063만원으로 전체 가계 평균부채 증가율(3.2%)을 넘음. 이러한 현실에도 소상공인들은 사회안전망에서 조차 소외되어 빈곤층으로 전락

약속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의 생존권 강화와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 지원 확대**
- 일정 영업이익 이하 소상공인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한시 면제 추진
-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주 사회보험료 실부담액 감소 지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
- 소상공인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 **「소상공인기본법(개)」, 「소상공인보호및지원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우한코로나19극복

02 우한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현재

▶ 우한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역 경제 초토화

▶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주요 품목과 함께 여행, 숙박, 도소매 음식업 등 전 산업분야에 경제적 피해 확산. 특히 자본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심각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해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나 집행과정의 미숙함으로 피해 구제 지연

약속

우한코로나19 경제적 대책 마련

▶ 당내 우한코로나19 대책기구 확대
-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의 분야별·업종별 피해 및 애로·건의사항 접수
- 당사자측과 공동대응하는 체제 구축하여 산업계·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대변
- 피해 구제를 위한 연관 법안 발의 및 상임위 활동 강화

▶ 정부의 대응방안 실효적 모니터링 및 지원예산 확대
- 장·단기 피해상황을 정확히 점검하여 맞춤형 대책 마련

▶ 「산업융합촉진법(개)」, 「소상공인보호및지원법(개)」, 「근로기준법(개)」

내 삶을 디자인 하다

지역균형발전

◆지방도시 실질적 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
◆지자체 자율적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 주민 참여 활성화
◆지역여행 활성화로 지역균형 발전 추진
◆지역별 문화체육 콤플렉스 도입
◆이장·통장 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지역균형발전 #기부금 #인구소멸방지

01 사라지는 지방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현재

▶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인구가 2019년 말 사상 처음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84곳(37%), 3,482개 읍·면·동 중 1,383곳(40%)이 30년 내에 소멸할 것으로 전망

▶ 현재에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0여건 이상의 관련 법령이 있으나 소관별 법령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약속

지방도시 실질적 지원 확대

▶ **'인구감소지역발전특별법' 제정**
– 급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지원 대책 마련

▶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 확대**
–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
– 노후 주택 개량비 지원 확대
–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공공기관에 우선 납품
– 국가에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건립 의무 부여
– 지역주민에 대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 확대

▶ 「인구감소지역발전특별법안(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기부금
#지방교부세

02 지역 모두가 균형 발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재

▶ 수도권에 인구비중이 50%, 매출 상위 1천대 기업이 81%, 지역 내 총생산(GRDP) 49%가 집중되어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기계적인 비율 조정에만 초점을 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

▶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에는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한 재정원칙이 지자체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아, 선심성 지출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부실이 우려

약속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

▶ 중앙과 지방 간에 균형발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 지역 간 균형 있는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대폭 인상

▶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강화
– 지자체가 재정 부담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 5년간의 재원 조달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

▶ 「지방자치법(제)」, 「지방교부세법(개)」, 「지방재정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

0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자치권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민선자치 출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가사무 대비 지방사무 비중이 30% 수준에 불과해 '반쪽 자치'라는 자조적 표현이 통용되는 현실

▶ 올해 1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해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400개 사무가 2021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에 이양 예정이나, 앞으로도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무를 이양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 필요

약속

지자체 자율적 자치권 확대

▶ 중앙과 지방 간에 지방이양 사무를 협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 지자체의 자율적 자치권 대폭 확대
– 주민생활 개선 필요 국가사무 계속 발굴, 소요 재원과 함께 지자체에 이양 추진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지방이양일괄법(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
#주민자치

04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지방자치로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현재

▶ 지역 현안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을 통해 임기 종료 전에 해직할 수 있는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의 요건이 현재 과도하게 엄격하여 운영 실적 미미

▶ 지자체의 확대된 권한을 감시·견제하고,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해서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약속

지방자치 주민 참여 활성화

▶ 지역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
-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규정된 주민참여제도 청구 요건을 지역 인구별로 차등화해 대폭 완화

▶ 주민자치에 관한 주요 정보 주민공개 의무화

▶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제)」, 「주민소환에관한법률(개)」, 「주민투표법(개)」, 「지방자치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여행
#관광

05 두 지역 거주와 체류여행 장려 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였으나 그에 비해 지방은 경기악화로 폭락

▶ 최근 여행 트렌드는 여가문화와 소비 등에 민감
- 여행 경험이 많아지면서 획일화된 관광보다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의 거리, 전통시장 방문 등 지역생활 밀착과 공감의 일상 같은 여행을 선호
- 떠날 준비에 힘들이지 않고 소소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근거리 잦은 여행,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 추구

약속

지역여행 활성화로 지역균형 발전 추진

▶ 지방과 농·어촌 세컨하우스 보유를 장려하는 정책 도입
- 빈집 자원관리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숙박과 관련된 규제 완화로 정주 여건의 대폭적인 개선
- 생활형숙박시설 및 공유민박 업종 규제 개선, 농어촌 지역 특별 허가 등

▶ 장거리 여행이나 체력 소모가 큰 여행이 아닌 지역의 소소한 장소를 연계한 콘텐츠 개발
- 미니멀여행, 체류여행(한달살기) 장려로 국민여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 인프라(모노레일, 곤돌라, 산악열차,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지원으로 도시거주 실버세대의 체류여행 촉진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문화 #체육

06 지역별 문화체육 콤플렉스를 조성하여 국민 여가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현재

▶ 지역 내 접근성이 좋은 대규모 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오래전에 지어진 낙후된 시설이거나 운동경기에 한정된 시설로 규모나 위치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짐

▶ 일부 지자체에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역주민의 스포츠 관람 여건을 조성했으나, 전국적으로 문화시설이 연계된 다목적 복합 문화공간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약속

지역별 문화체육 콤플렉스 도입

▶ **전국의 낙후된 공공 체육시설을 운동경기, 공연, 문화 · 여가생활, 상업시설을 두루 갖춘 거점별 복합 문화체육 랜드마크로 개발**
- 지역 여건에 따라 수요가 많은 인기 체육종목의 실외·실내경기장, 체험형 체육시설 조성
- K-POP 전문 공연장, 다목적 공연장, 상업시설과 연계된 생활형 도서관, 미술관, 전시관 조성
- 쇼핑몰, 지역 특화 음식점, 지역 특산물 판매점과 연계
- 전국 거점별 다목적 문화체육시설 조성 : 약 10개소

▶ **전국 약 256개의 낙후된 공공 체육시설을 지역 여건에 적합한 규모와 특성의 '생활권형 복합 문화체육시설'을 조성**
-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 #수당

07 이장·통장 수당 월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현재

▶ 전국 9만여 이장·통장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의 일선 현장에서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힘든 일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분과 위상이 열악

▶ 이장·통장은 국가와 지방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함께 보조하고 있으나, 정부는 15년 만에 업무수당을 월 10만원 인상하며 (월 20만원→30만원), 기존 업무수당에 더해 인상 비용까지 전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 전가

약속

이장·통장 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 이장·통장 업무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인상액은 국가가 지원

▶ 이장·통장의 지위 및 각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이장·통장의지위및지원에관한법률안(제)」, 「지방자치법(개)」



살맛나는 농어촌

- ◆농어민 · 서민 소득증대 위한 세금 절감
- ◆'(가칭) 농어업인 연금제' 실시
- ◆가축 전염병 방역 · 축산물 안전체계 구축
- ◆농산물 가격 하락 · 자연재해의 국가 책임 강화
- ◆농어촌 생활복지 확대
-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 확대
- ◆수산직불제 개편과 TAC 내실화

#농촌 #어촌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조세제도

01 농어민과 서민의 세금 절감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 농어업의 시설화 추진 등으로 기자재 사용이 늘어나고있어, 기자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등 조세 감면 연장 필요(2020년 말 종료)

▶ 농어민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농 · 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등의 비과세 혜택이 금년 말 폐지 예정

약속

농어민 · 서민 소득증대 위한 세금 절감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

▶ 농어민과 서민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 또는 확대함으로써 소득 증대에 기여
- –농어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조정
- –농 · 수협과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예탁금 한도 확대 (3천만원 → 5천만원)

▶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수산업 협동조합의 법인세 저율과세 등 조세감면 현행 유지

▶ 「조세특례제한법(개)」,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살맛나는 농어촌

#농촌 #어촌 #직불금

02 '(가칭) 농어업인 연금제'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 농정예산은 현재 국가 전체 예산의 2.96%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
- 환경·문화·식량안보·경관보전 등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농어업 가치에 따른 보편적 지불 요청 확대
- 직불금이 지원되지 않는 수산업·임업·축산업 직불제 도입 요구도 증대

약속

'(가칭) 농어업인 연금제' 실시

- 농축임수산 가구에게 연 120만원 지원하는 '(가칭) 농어업인연금제' 추진
  - 농어업인의 일정 수준 소득보장과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식량안보, 공동체 보전, 농업경관 보호, 홍수조절 등)에 대한 국가책무 강화
- 수산인 및 임업·축산인의 소득안정 위한 직불제 도입
- 240만 농업 인구를 위한 농업예산 확대로 안정적 재정 확보
- 「농업소득보전법전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 「임업·축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안(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살맛나는 농어촌

#농촌 #가축전염병 #축산물

03 가축 전염병 방역·축산물 안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유입과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 요구 증대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환경부·통일부·국방부의 북한 눈치보기 늑장대처와 소극대응으로 돼지열병이 확산되어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정부의 무대책과 차단방역 조치인 '재입식 제한 기간 장기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증가

약속

가축 전염병 방역·축산물 안전체계 구축

- 예방적 살처분 이행한 축산인에게 경영손실 비용 지원
-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행정처벌 유예와 계도기간 연장
- 축산인 피해 최소화 위한 방역매뉴얼(SOP) 재점검
  - 살처분 범위, 이동제한, 재입식 기준 마련 등
- 축산단지화 확대 통한 체계적 가축전염병 방지
- ASF·AI·구제역 등 동물전염병 방역관리 업무를 수의방역 담당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일괄 이관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 신속 초동방역 강화 위한 긴급방역팀 제도화
- 고위험 동물감염병 방역 및 치료 R&D 우선적 지원
- 「축산법(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살맛나는 농어촌

#농촌 #농산물 #재난 #자연재해대책

04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농산물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 피해가 제외되어 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과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농작물 수급 안정 위한 농업통계 전문화 필요성 증대
-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9%에 그치고 있음
  - – 특히 생육 기간이 짧고 부가가치가 낮은 고추나 배추 등은 재해보험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저조

약속

농산물 가격 하락·자연재해의 국가 책임 강화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한 피해액 산정에 농작물 피해금액 포함
- ▶ 태풍·홍수·동해 등 재해로 인한 수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품목별 수입감소 보장 확대
  - – 기초농산물 수입보장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예산 확대
- ▶ 농작물 수급안정 방안 마련
  - – 쌀생산조정제 3년 연장
  - – 농업통계 전담하는 전문기관(가칭, 농업축산통계국) 신설
  - –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 조절 생산량 확대(5% → 20%)
- ▶ 「재난안전기본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살맛나는 농어촌

#농촌 #어촌 #어르신 #건강검진

05 농어촌 농어업인을 위한 생활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 농가인구는 1970년 1,442만명에서 2018년 231만명으로 급격히 감소 (전체 인구중 농가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44.7%에서 4.5%로 감소)
  - – 고령화, 환경오염, 농촌공동체 약화 등 건강한 농촌사회의 유지·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이 누적되어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약속

농어촌 생활복지 확대

- ▶ 농어민 자율공동체 지원을 위한 '농어민회관' 설치 추진
  - – 시·군 단위로 농어민의 자율적 회의, 교육, 모임, 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 제공(국가지원으로 건립 후 지자체와 농어민이 자체적 운영)
- ▶ 농어업인 마을 급식 사업(공동체 한밥상) 정부 지원 확대
  - – 마을 사랑방 역할 활성화, 영농철 식사준비 인력 지원
  - – 봄·가을 각 15일씩 총 30일간 마을 공동급식 지원
- ▶ 도 단위 1개 이상 거점 기숙형 중·고등학교 지원 활성화
- ▶ 영농도우미, 행복바우처,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 추진
- ▶ 60세 이상 농어업인 및 여성 특화 건강검진 확대
  - – 농어촌 오지 마을에 대한 순회 진료와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1개 도별 1대 이상의 순회의료 버스 지원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살맛나는 농어촌

#어촌 #조세제도 #수산업 #수협 #수당

06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농업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산 단계에서도 어업 분야는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 비교해 수산업이 차별받고 있는 실정
- 어촌계장은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 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있으나 경제적 지원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

약속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 확대

- 수산 분야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 외국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벌금추징금 및 국고귀속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게 하고, 이를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지원
- 어촌계장 업무 지원 월 30만원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 행사에관한법률(개)」, 「국가재정법(개)」, 「수산업협동조합법(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 살맛나는 농어촌

#어촌 #조세제도 #수산업 #직불제 #낚시 #TAC

07 수산직불제 개편과 TAC(총 허용 어획량) 내실화로 어민과 어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현재

- 수산직불제 전면 개편을 통한 어업의 소득안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기존 어선·어구·어법 규정 중심의 어업 관리체계 전환과 금어기·휴어기 지정 시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정부에 대한 어업인의 불신 증대
- 불법 어획물 및 수산물 이력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수산물 신뢰 향상 필요성 증대

약속

수산직불제 개편과 TAC 내실화

-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의 공직적 가치 보전 위한 수산직불제 전부 개편
- 금어기·휴어기 설정 시 지역 어민 의견 수렴 명문화
- TAC 내실화 대상 어종과 참여 업종 확대, 어자원 보호 인센티브 제공
  - TAC 관리 인원 확대 (2020년 95명 → 2022년 300명)
  - 경영개선자금 인센티브 지원 (연3%에서 2%로 인하 등)
  -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 수산어업물 안전 위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 현행 15개 품종에서 주요 어종 64개 품종으로 확대
- 해양·내수면 '낚시 복합 타운' 조성
- 「수산업법(개)」, 「낚시관리육성법(개)」

미래통합당 미로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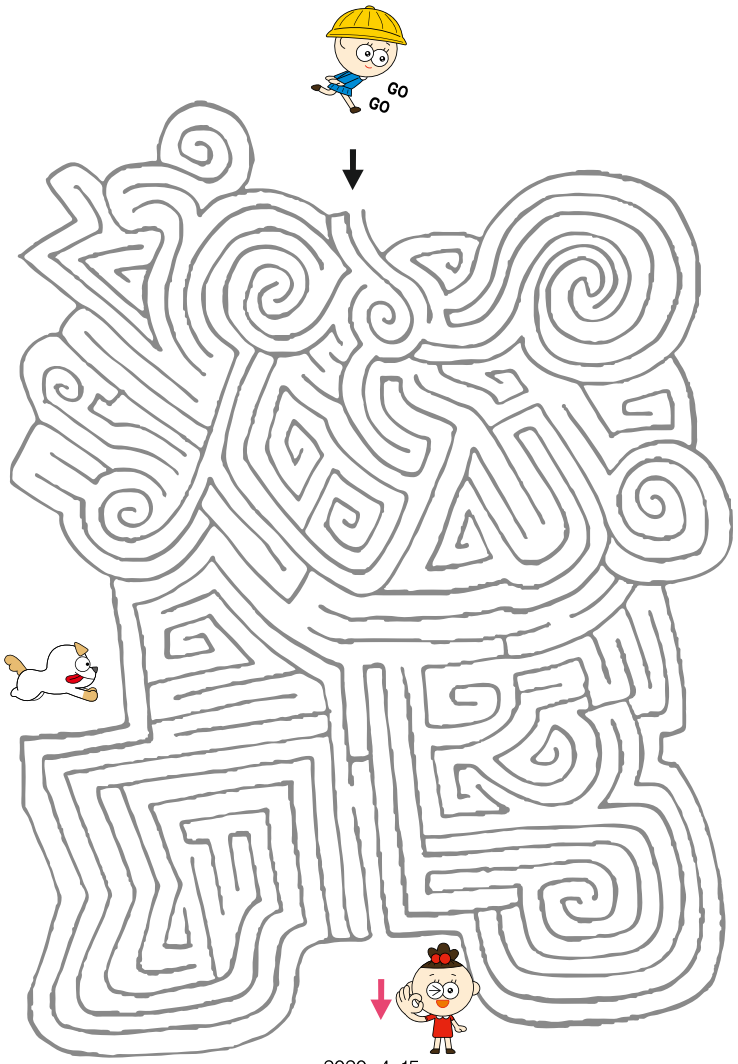
길 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주세요!



길 잃은 대한민국,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2020. 4. 15 우리의 투표와 함께
미래통합당이 혁신의 정책으로
새로운 미래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혁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힘을 믿습니다.



2020. 4. 15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02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우리는 희망의 피켓을 듭니다
공정 피켓



대한민국 청년, 취업하기 왜 이렇게 힘든가요?

취준생의 꿈, 정책으로부터

경제가 어려울수록 청년은 좋은 직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뉴스에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꿈에 그리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채용비리 문제가 나올 때 마다 허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공정하다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 오늘도 노량진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가장 좋은 복지는 '취업'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N포 세대'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미래통합당에 어떤 젊은이도 소외 없이 공정한 취업을 할 수 있는 공약 마련을 요청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취준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희망은 '공정취업' 입니다



민심과 미래통합당이 만들어가는 공정 프로젝트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를 뻔뻔하게 두둔해 공정 가치에 목마른 청년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청년들이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공정한 사회 속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를 극복하고 공정의 가치 아래 도전하며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조국방지법', 채용 비리 근절 등 '청년 7대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채용청탁과 고용세습 뿌리를 뽑기 위해 당과 제21대 국회에 청년이 참여하는 채용 감시·감독 기구를 만들고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 채용청탁시 처벌을 강화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개정하여 취업을 향한 청년들의 꿈에 공정한 희망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불공정 개혁

- ◆공수처 폐지 등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 ◆자의적 공권력 남용 방지
-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
- ◆태양광게이트 비리규명 및 척결
- ◆공영방송 정상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뉴미디어위원회 신설
- ◆문화예술계 · 체육계 공정질서 확립
- ◆지방체육계 정치화 방지
- ◆준연동형 선거제 폐기

#검찰개혁
#공수처폐지

01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하겠습니다

현재

▶ 지난 '조국 사태', '검찰 인사 학살'을 통해 국민들은 권력이 검찰 수사에 어떻게 개입하고 방해하는 지에 대해 똑똑히 목격하였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검찰수사의 '민주적 통제'라는 초법적 발상을 운운하며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인사와 예산을 하고 있는 현 제도를 이용해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있음

약속

공수처 폐지 등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 위헌적 공수처 폐지

▶ 검찰청 인사 및 예산 독립
-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위해 검찰 인사위원회 독립 및 구성 다양화
-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게 예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도록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

▶ 검찰 총장 임기 6년으로 연장
-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이 소신있게 수사 할 수 있도록 함

▶ 「공수처폐지법(제)」, 「정부조직법(개)」, 「검찰청법(개)」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불공정 개혁

#공기업
#인사청문회

02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 최근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 검증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지자체장의 정실인사 등 고질적인 인사병폐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제기

약속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임용을 보장

▶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공기업법(개)」, 「지방자치법(개)」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불공정 개혁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특별감찰반
#행정조사
#공권력

03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공권력 남용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현재

▶ 행정조사기본법은 개인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조사활동에서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지켜야할 포괄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 2007년 제정 이후 개정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실질적인 피조사자 권익 보호 기능이 미흡하다는 학계의 지적 다수
- 특히, 특별감찰반 공무원 핸드폰 임의제출 조사와 같은 사실상 불법감찰에 대한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 증대된 상황

약속

자의적 공권력 남용 방지

▶ 불필요한 행정조사 등 자의적인 공권력 남용 방지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
- 자료제출 요구 및 보고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위법하게 취득한 자료의 행정조사 사용 배제 규정
- 적용대상에 권익침해 우려가 큰 분야인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조사 포함

▶ 「행정조사기본법(개)」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불공정 개혁

#원전
#탈원전정책폐기

04 문재인 정권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권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은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를 비롯하여, 미래 세대에게 경제적·산업적 부담을 씌우고 미래로 가는 에너지 사다리를 태워버리는 잘못된 정책**
- 새로운 산업구조와 4차 산업혁명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간헐적 발전 에너지원에만 집중
- 태양광 과속 공급으로 지방에서는 각종 비리 만연과 환경파괴, 농어민 피해 속출

▶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이고 위법적, 탈법적인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 수립 절실**

약속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

▶ **국가 중요 에너지 정책 추진 시 국회 의결 의무화 추진**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 추진**
-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방지, 원전산업벨트 회복 위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의도적 경제성 조작으로 영구정지 된 월성 1호기 재가동

▶ **원전산업 생태계 복구를 위한 지원법 제정**
- 원전부품 기업 도산 방지, 원전산업지역 경제회복, 원전학계 및 전문인력 지속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지정및육성에관한특별법(개)」, 「에너지법(개)」, 「전기사업법(개)」, 「집단에너지사업법(개)」, 「원전산업지원법(제)」**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불공정 개혁

#탈원전정책폐기
#국정조사
#특검
#태양광게이트

05 문재인 정권 태양광게이트 비리규명 및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 **전국토를 황폐화시키는 태양광 사업은 친여실세 좌파 세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나눠먹기**

▶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 폭증**
- 친여권 성향 협동조합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불법 하도급 운영
- 발주비용 과다 책정 특혜, 시공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각종 비리의혹 제기
-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권차원의 은폐 조작 시도 포착

약속

태양광게이트 비리규명 및 척결

▶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 발의 추진**
-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의 과오를 밝혀내고, 연관된 탈법·불법 행위 철저 수사
-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

▶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비리특검법(제)」**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불공정 개혁

#방송
#공영방송
#편파방송방지

06 편파방송으로 얼룩진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현재

▶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지나친 개입으로 편파방송 문제는 방송사상 매우 고질적인 문제**

– 이는 공영방송지배구조 문제에서 시발되며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담보 불가

– 현 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의 사람이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고 이사회는 집권당에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되며 야당 추천 이사는 소수의견으로 전락

약속

공영방송 정상화

▶ **민주당이 야당시절 발의한 방송법(박홍근 의원, 16. 7. 21)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

– 「방송법(개)」: KBS 이사를 11인에서 13인으로 증원하고 국회에서 여7 : 야6으로 추천

– 「방송문화진흥회법(개)」: MBC 방문진 이사를 9인에서 13인으로 증원하고 국회에서 여7 : 야6으로 추천

–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 EBS 이사를 9인에서 13인으로 증원하고 국회에서 여7 : 야6으로 추천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불공정 개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파방송방지

0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뉴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 **최근 야당 불리 편파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결과 행정지도 1건, 기각 36건**

– TBS 15건, KBS 8건, MBC 4건, YTN 3건, MBN 3건, 연합뉴스TV 1건, SBS 1건, JTBC 1건

▶ **방송심의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의 편파성 및 불공정성이 도를 넘으며, 고유기능을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

약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뉴미디어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및 뉴미디어위원회 신설**

– 뉴미디어위원회는 방송사업자 허가·재승인 등의 기존 업무를 맡고 방송통신심의 기능은 없애거나 대폭 축소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개)」**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불공정 개혁

#문화 #체육 #예술 #성범죄방지 #불공정방지

08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불공정을 바로 잡겠습니다

현재

▶ 스포츠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으로 불거진 '기회와 과정의 불공정' 논란
-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정부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논란

▶ 문화예술계 · 체육계의 연이은 성폭력 피해 고발

▶ 문화예술계 · 체육계에 만연한 불공정 실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약속

문화예술계 · 체육계 공정질서 확립

▶ 국가권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스포츠 단일팀 구성 방지 체계 마련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각종 대회 참가 규정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정부 개입 최소화, 정치적 개입 금지와 자율성 확보 명시

▶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공정 · 윤리 기반 확립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 마련
- 당 차원의 신고자 ·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상시 운영 · 지원
- 체육계 독립적인 공정 기반 확립을 위해 신설되는 '스포츠윤리 센터' 운영 전반 지속 점검, 미성년자 학생선수 대응 강화
- 문화예술계 전담 대응 기구 신설하고, 미성년자 대중문화 예술인 권리 보장 강화

▶ 「국민체육진흥법(개)」, 「스포츠기본법(제)」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불공정 개혁

#체육 #체육회

09 지방체육계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체육분야에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지방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 지방체육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체육계 선거 실시

▶ 지방체육회 예산은 약 80%가 지방비에 의존함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방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체육회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 우려
- 지방체육계가 해당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요구에 종속되지 않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비로부터의 의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 필요

약속

지방체육계 정치화 방지

▶ 지방체육계가 정치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지방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최소한의 독립적 행정을 위한 운영 지원 도입

▶ 민간 지방체육단체장 선거 준비, 실시 등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전국 시 · 도 체육회의 운영 지원 확대

▶ 「국민체육진흥법(개)」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불공정 개혁

#선거제
#준연동형선거제폐기

10 좌파세력 장기집권을 위한 준연동형 선거제 반드시 폐기하겠습니다

현재

▶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결정해 온 관행을 완전히 짓밟고,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연동형 선거제를 민주당 등 4+1 야합세력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날치기 처리하는 의회 폭거 자행

▶ 그 결과 국민은 자신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되어 역대 가장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것으로 우려

약속

준연동형 선거제 폐기

▶ 4+1 야합세력의 괴물 누더기 선거법 폐기를 통해 선거제 정상화 추진
– 준연동형 선거제 폐기를 통해 정상적 선거제 운영

▶「공직선거법(개)」

내 삶을 디자인하다

공정 교육

◆ '조국방지법' 마련
◆ 학교 정치화 방지
◆ 자사고 · 외고 · 국제고 존치, 일반고 경쟁력 강화
◆ 교육감–시 · 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 전교조 중심의 교장공모제 폐지
◆ 선생님 교권 강화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 초등돌봄교실 시간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공정 교육

#교육 #입시 #수능 #정시 #희망사다리 #대학

01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고 희망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이 전체 모집 비율의 77.3%를 차지
–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 투명성에 많은 의문 제기
– 최근 '조국 (자녀)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섬
– 교육부는 2019년 11월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2023년까지 정시 모집 비율을 40% 이상 높이겠다는 '찔끔' 확대에 그침

▶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서 봉사 및 대외 활동 등 각종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입시 부정이 만연하지만, 입학원서 보존 규정이 없어 처벌과 불공정 입시 예방이 어려운 상황

약속

'조국방지법' 마련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
– 단,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

▶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하여 입시 불공정 사례 발생 방지

▶ 「고등교육법(개)」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공정 교육

#교육
#정치편향교육저지
#인헌고사태

02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하겠습니다

현재

▶ **최근 서울과 부산의 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 서울 인헌고의 경우 '정치 편향'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이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처분을 받았음

▶ **학생들에게 특정 사상을 선동하고 주입하는 것은 명백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행위임**
- 공직선거법의 날치기 통과로 아무런 준비없이 고등학교 3학년 일부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짐에 따라 학교 현장이 정치화되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약속

학교 정치화 방지

▶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단에서 배제**
- 학교에서 교원이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할 때는 학부모가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학교 내에서는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토론회 등 금지**
- 학생은 학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수업연한 조정을 통해 만 18세 이전에 고교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학제개편' 적극 추진**
- 국민이 공감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

▶ **「초·중등교육법(개)」, 「공직선거법(개)」**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공정 교육

#교육
#자사고
#외고
#국제고
#특목고

03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을 원상회복하고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 **2019년 전국 24개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교육청 재지정 평가를 받아 11곳이 기준점을 넘지 못했는데,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등학교만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함**
-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한 자사고 10곳 모두 '지정취소 처분 효력 정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됨
- 법원에 의하여 제동이 걸리고 조국사태로 민심이 이반하자 자사고, 외고 등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육부는 단계적 폐지정책에서 일괄 폐지정책으로 돌변함
-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함

약속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일반고 경쟁력 강화

▶ **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제21대 국회에 '(가칭) 교육의 힘 위원회'를 구성**
- 학부모, 교사 등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교육을 살리는 개혁방안을 함께 모색

▶ **「초·중등교육법(개)」**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공정 교육

#교육
#교육감
#시도지사
#지방선거
#선거제

04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의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 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약속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선거제도 도입하겠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개)」,「공직선거법(개)」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공정 교육

#교육
#교장공모제저지
#교사

05 전교조 중심의 교장공모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 **교장공모제는 젊고 능력 있는 교사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특정노조 출신의 승진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전교조 독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 높음**

– 2015년~2017년도 무자격 공모교장 중 80%가 전교조 출신, 2018년 1학기에는 4명 중 2명, 2학기에는 대부분의 시·도가 전교조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함

– 2018년 11월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 투표에서 A교사가 투표지 10여장에 '찬성' 표시를 해 결과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음

– 교육부가 2017년 12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입법 예고할 당시, 공문으로 의견을 제시한 학교의 91.7%와 팩스로 접수된 의견의 80.2%가 반대 의견을 표명함

약속

전교조 중심의 교장공모제 폐지

▶ 무자격 교장공모제 대폭 축소

▶ 공모제 응시 가능한 교원자격 강화

▶「교육공무원법(개)」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공정 교육

#교육
#교사
#교권
#선생님

06 수업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2019년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87.4%에 달해 역대 최고로 나타남

▶ 최근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연동되는 교권 보호가 필요함

약속

선생님 교권 강화

▶ **교육활동 침해 범위 확대 및 명시화 위한 제도 개선**
-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 업무시간 외에 지속적으로 유선이나 SNS로 연락하는 행위
- 학생을 통해 교육활동을 무단히 녹음하는 행위 등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개)」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공정 교육

#교육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학

07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인구 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인구 자연증가율이 0%를 기록함
- 인구의 국제이동을 제외하고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한 인구 증가가 멈춘 것임
- 인구 감소는 성장 잠재력 저하, 총수요 위축에 따른 소비 침체, 노인 빈곤 악화, 정부 재정 압박 등 부정적 영향으로 국가 존위까지 위협할 수 있음

▶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현재는 소득 8구간 이하까지 받을 수 있음

약속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시 소득제한 폐지**
- 다자녀 가구 교육비 부담 축소를 위해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모든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확대 지원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 공정 교육

#교육
#일자리
#학교
#돌봄전담사

08 초등돌봄교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돌봄전담사가 학교에 남아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서비스 제공 대상임**
- 6,117개 초등학교(13,910실)에서 29만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 (2019년 4월말 기준)
- 올해(2020년)는 돌봄교실 700실 확충으로 30만 4천 명에게 돌봄 제공이 정부 목표

▶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의 고용형태는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와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1시부터 5시까지)로 나뉘는데 학교마다 1명씩 배치된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행정 업무를,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돌봄 업무를 맡고 있음**
- 서울시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교실 운영 전후로 활동을 준비하거나 장소를 정리하는 시간 등 대부분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하고 있으나 추가 수당이 없음

약속

초등돌봄교실 시간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당한 근무시간 인정**

▶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 지원 확대**

내 삶을 디자인하다

미래통합당 가로 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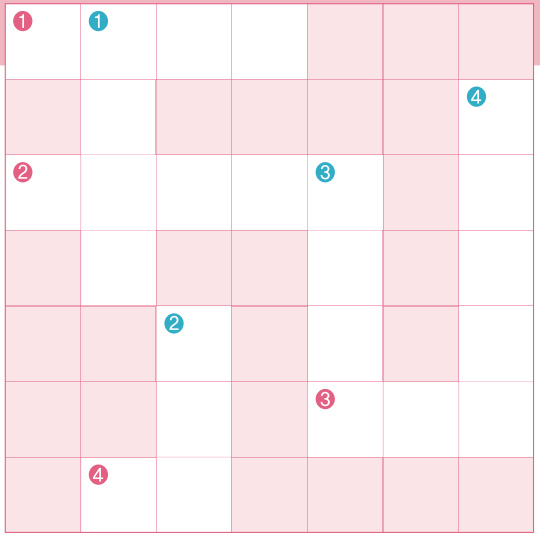
낱말 퍼즐을 풀어보세요!



투표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책을 향한 우리들의 관심 아닐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지만
한자한자 적어가며 퍼즐의 답을 맞춰가듯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모범의 답이
미래통합당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혁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힘을 믿습니다.



가로 문제

가로

❶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 ○○○○으로 지정

❷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한미연합 사령관에게 있는 ○○○○○ 전환

❸ 10여 개 부처에 분산 관리되어 있는 관광 행정 기능을 통합한 ○○○ 신설로 관광산업 활성화

❹ 빅데이터, AI 등 ○○기업 육성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

정답 맞춰보기
가로
❶ 재난지역 ❷ 전시작전권 ❸ 관광청 ❹ 벤처

세로 문제

세로

❶ 20만 난임 인구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비 전액 지원

❷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는 ○○○ 폐지

❸ 금융감독원, 국세청, 특별감찰반 등 ○○○○ 임의적 공권력 남용 방지

❹ 우한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처를 위한 콘트롤타워 ○○○○○ 신설

정답 맞춰보기
세로
❶ 난임시술 ❷ 공수처 ❸ 권력기관 ❹ 질병관리청

03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우리는 희망의 피켓을 듭니다
안전 피켓



불안한 대한민국, 안전해 질 수 있을까요?

안전한 대한민국, 정책으로부터

자고 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해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습니다. 또 잊을만하면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우리 머리 위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혼자 사는 여성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안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제는 우한코로나19 감염병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 지킴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미래통합당에 기본을 지키는 공약을 요청합니다.

나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희망은 '안전' 입니다



민심과 미래통합당이 만들어가는 안전대한민국 프로젝트

안보 재앙에 이어 이제는 보건 재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한코로나19' 추경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 오락가락 마스크 대책 등 대응 실패에 따른 사과는 없고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의료기관 격리 및 여행정보력안내(ITS)설치 의무화,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 설립,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안보문제에서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3차례의 미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진전이 전혀 없었고, 북한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강화와 한 · 미간 '핵동맹' 추진,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9.19 남북군사합의폐기로 무력화된 우리 국방력을 회복시켜 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생활 안전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
-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
- ◆경찰 ·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대폭 인상
- ◆소방장비 예산 2배 확대
- ◆권역외상센터 · 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
- ◆안전 대한민국 시스템 마련
- ◆미세먼지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
- ◆미세먼지 국제공조로 근본 대책 마련
- ◆정부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미세먼지 대책
- ◆미래 꿈나무들에게 미세먼지 안심 환경 조성
- ◆국산 농축산물 신뢰 강화

#안전 #교통사고방지 #어린이

01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만들겠습니다

현재

▶ 어린이보호구역 중 보도 · 차도 미분리(335개소), 도로구조가 위험한 지역(97개소) 등 여전히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54%가 하교시간인 14시~18시 사이에 발생

▶ 1,932개 노인보호구역 중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4곳(0.018%)에 불과하여 어르신을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

▶ 교통 과태료 · 범칙금은 본질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부과 · 징수하는 것이나,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교통안전시설 개선보다는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

약속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

▶ **교통사고 없는 통학로 조성**
- –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확대
- – 사고우려가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하교시간에도 교통 경찰관 추가 배치

▶ **노인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신설**
- – 교통 과태료 · 범칙금을 노후화된 교통장비 교체에 사용

▶ **「도로교통법(개)」,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안(제)」**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생활 안전

#안전
#범죄예방디자인
#1인가구

02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 만들겠습니다

현재

▶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 부각되며, 범죄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 일각에서 면밀한 범죄예방 진단 없이 지자체장의 관심에 따라 1회성, 인기 위주로 편성되어 꼭 필요한 저소득층 거주지역이 소외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

약속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

▶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CPTED) 5,000개소 신규 설치**
–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범죄예방디자인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규 사업에 한해 국가가 지원

▶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 여성 1인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방범장치 〈스마트 안심세트〉 지원
– 필수적인 안전장치 제공
– '성범죄자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

▶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제)」, 「여성폭력기본법(개)」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생활 안전

#경찰
#소방
#위험수당
#소방복합치유센터

03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월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현재

▶ 일선 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투입되는 경찰·소방공무원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일하고 있음에도 위험근무수당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월 6만원, 하루로 따지면 2천원에 불과

약속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 대폭 인상

▶ **경찰·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월 20만원으로 대폭 인상**
(현행 월 6만원→20만원)

▶ **소방복합치유센터(일명 소방병원) 건립 적극 지원**
–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에 예산 적극 지원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생활 안전

#안전
#소방
#화재예방

04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예산 2배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현재

-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고, 지원 예산 비율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안정한 상황
- 주택가,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에서의 화재 초등 진압을 도와주기 위해 설치된 비상소화장치가 전국 9,400개 중 60%(5,648개) 이상이 구형인 분리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

약속

소방장비 예산 2배 확대

-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예산 2배로 대폭 증액
- 소방장비 지원 예산 비율을 정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안정적으로 지원
- 비상소화장치를 사용이 간편한 신형 일체형으로 전면 교체
- 「지방교부세법(개)」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생활 안전

#안전
#병원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의사
#간호사

05 권역외상센터 · 응급의료센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2의 이국종 사태를 방지하겠습니다

현재

-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의사 · 간호사 인건비 지원이 실제 인건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에도 불구, 문재인 정권 3년간 권역외상센터 의사 인건비 지원금은 동결, 간호사 인건비 지원금은 삭감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인건비 지원 또한 전무
- 국가 지원 부족으로 응급의료 전문 의사 · 간호사 수급 어려워 국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어려운 상황

약속

권역외상센터 · 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

- 권역외상센터의 의사 · 간호사 인건비 단가 인상
  - 의사 인건비 지원금을 수도권(인천 · 경기)의 경우 현행 1억 4천만원에서 ⇒ 2억원으로
    지방의 경우 현행 1억 4천만원에서 ⇒ 3억원으로 인상
  - 간호사 인건비 지원금을 현행 4천만원에서 ⇒ 6천만원으로 인상
- 권역응급의료센터(38개소) 의사 · 간호사 각각 20명의 인건비를 권역외상센터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
-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방안 검토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생활 안전

#재난 #미세먼지 #안전

06 국가재난과 미세먼지로부터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환기장치 도입이 적용되는 단지는 2018. 1월 이후 승인 분부터 시행 중

–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공용시설에만 설치하여 세대 내 대책은 전무하여 미세 먼지에 그대로 노출

약속

안전 대한민국 시스템 마련

▶ 안전 위협요소 진단 및 선제적 · 예방적 안전시설 확충

– 지하공간통합지도 전국 확대 및 정보 추가 · 보완

▶ 노후 기반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정보 시스템 체계화

– 범부처 안전 TF 강화, 안전위해요소 실태조사 및 안전보강 실시, SOC 안전 이력시스템 도입, 안전종합대책 마련

▶ 대규모 택지지구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

▶ 공공임대주택 환기장치 도입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거주자 대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그린홈) 항목에 포함

▶ 「국토계획법(개)」, 「시설물안전법(개)」, 「장기임대주택법(개)」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생활 안전

#미세먼지 #ICT #빅데이터 #AI #탈원전정책폐기

07 미세먼지 제로를 위해 지능형 정보제공 ICT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 재앙적 탈원전 정책이 문재인 정권발 미세먼지 '주범'으로 대한민국을 숨막히게 하고 국민에게 '마스크 일상화'를 강요

– 문재인 정권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면서 미세먼지의 발생지인 석탄 화력과 LNG(액화 석유가스)의 발전량을 늘리고, 미세먼지를 대규모 줄일 수 있는 원전을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폐쇄하고 배척

약속

미세먼지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

▶ 지능형 정보제공 ICT 모니터링 체계도입

– 미세먼지 '제로(0)'를 위해 사물인터넷 · 빅데이터 · 인공지능 · 드론 등 ICT를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과 분석, 감시체계 고도화 전략 수립 등 전국에 미세먼지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생활 안전

#미세먼지 #외교 #환경

08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과 산업현장 부문 등에 규제를 강하게 하는 반면, 중국 등과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실질적 규제공조가 성과조차 없음

– 갈수록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관련 기준도 강화되고 있어 국제 규제공조가 미세먼지 해결의 첩경이라는 진단

약속

미세먼지 국제공조로 근본 대책 마련

▶ '(가칭) 미세먼지 근절특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초당적으로 전개

– 산업계 미세먼지 감축 기술개발 지원 대책 마련

▶ 한 · 중 정상 연례회의, 한 · 중 환경장관 상설기구 등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 촉구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의제 채택 등 공동대응을 추진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생활 안전

#미세먼지 #외교 #환경

09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권은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100만대 감축과 전기 ·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2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공부문의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 실적 저조

▶ 현행 법규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친환경자동차를 개발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외면하는 실태

약속

정부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미세먼지 대책

▶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구매비율을 강화

– 현행 70%에서 100%로 전면 교체를 목표로 하여 친환경차량 대중화에도 점진적으로 기여

▶ 경찰수송버스 등 도로에서 장시간 공회전 하는 특수차량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 의무적으로 구매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진공 · 살수청소차 보급 예산 확보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개)」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생활 안전

#미세먼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환경

10 미래 꿈나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 학교 주변의 공기오염 실태와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유지 · 관리 실태 파악 미비
- 각 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그 실태 점검과 대책이 필요

▶ 영유아와 초중고생들이 이용하는 통학과 학원차량이 디젤차로 운영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과 함께 아이들의 건강도 위험에 노출

약속

미래 꿈나무들에게 미세먼지 안심 환경 조성

▶ 현재 공기청정기가 각 학교 교실별로 일률적으로 한 개씩 배치되고 있는 획일화된 상황을 개선
- 공단지역 등 지역 대기오염 실태를 고려하여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예산 등 학교와 동일한 대책 적용

▶ 어린이와 학생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여 친환경차로 전환 지원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생활 안전

#농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식품

11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로 국산 농축수산물 신뢰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지역농산물, 푸드직매장, 군대, 학교급식 등), 중소농을 위한 안정적 소득보장, 지역민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대한 요구 증대

▶ 일본산 수산물의 불법 유통 의혹 등 국산 수산물의 신뢰 저하

약속

국산 농축산물 신뢰 강화

▶ 농축수산물 안전인증제도 시행 강화
- 농산물(GAP), 축산물(HACCP), 수산물 이력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등

▶ 학교 및 관련 공공기관에 친환경, 로컬푸드, 유기가공품 70%까지 공급 확대

▶ 농식품지원 활성화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확대

▶ 학교 과일 급식 및 우유 급식의 통합 운영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대상자, 우선 돌봄차상위 대상자 우선 지원

▶ '수입 수산물 통관 제도'의 투명성 제고 및 농축수산물 위생을 위한 현물 검사 강화

▶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개)」 「식생활교육지원법률(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개)」

한반도 진짜 평화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북한 비핵화 주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한 눈치 보기 정책 폐기
◆남북협력기금 국민통제 강화
◆북핵 폐기 전제로 남북교류협력계획 수립
◆분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아픔 치유
◆북핵·미사일 군사대응태세 구축
◆북핵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한반도 진짜 평화

#안보
#외교
#한미동맹

01 강력한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북한 눈치보기 정책으로 한미동맹 와해 수준

▶ 막연한 감상주의·이상주의에 기대어 친중 편향적 외교정책 수립
– 굴욕적인 3不정책을 상납했음에도 사드 보복조치는 지속

약속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 한미 간 상설 다채널 협의체 신설로 동맹 저변 확대 및 근간 강화
–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복원
– 한미 외교·국방·통상 장관 회담 추진
– 한미 의회 간 '외통위+국방위' 연례적 연석회의 추진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아시아 전략 급변에 따른 전략적 위험성 최소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략적 비전 수립 추진

▶ 대중 3불 정책 공식 폐기
– 외교적 주권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포기한 '미국MD체제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시키지 않는다는 외교원칙 공식 폐기 위한 국회 결의안 추진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한반도 진짜 평화

#안보
#북한
#비핵화

02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겠습니다

현재

▶ 북핵 보유는 기정사실화되고 남한을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상황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 관련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주제넘게 끼어들지 마라' 와 같은 모욕을 당하며 북한으로부터 운전자는커녕 대화상대로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약속

북한 비핵화 주도

▶ **미북대화 중재자가 아닌 대한민국 주도 북한 비핵화 추진**
- 한미 의회 차원에서 연례적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안보리에 제출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재 해제는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후 추진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중 3국 공조 체제 기반 조성 추진**
- 한미중 3국 의회, 정부, 민간연구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 출범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한반도 진짜 평화

#안보
#외교
#지소미아

03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현재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 번복 사태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중대한 공백 발생

▶ 문재인 정권은 한미, 한일, 한미일 문제를 국익 중심이 아닌 민족주의적 사고로 인식하여 한미일 협력 증진을 위한 신뢰관계 붕괴

약속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한일 지소미아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비책 협력 강화**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공식 결정

▶ **한일 의회 차원 '한일미래비전위원회' 구성하여 과거사 문제 등 포괄적 논의 추진**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한반도 진짜 평화

#안보 #북한 #북한인권

04 굴욕적 '북한 눈치 보기' 정책들을 폐기하겠습니다

현재

- ▶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대화에 연연한 나머지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
- ▶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에는 눈 감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조차 외면하고 있음
- ▶ 북한인권법 제정된 지 4년에 이르도록 여당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음

약속

북한 눈치 보기 정책 폐기

- ▶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 금지법' 제정 추진**
  -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재발방지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의무 명문화
- ▶ **북한인권법 조속 출범 추진**
  - 재단 출범 시에는 통일부 장관이 명문화된 당연직 이사를 임명하도록 부칙 신설
- ▶ **북한 인권 범죄 기록 및 처벌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강화**
  - 북한인권문제는 단순히 '인권유린' 차원이 아닌 '인권범죄' 차원의 접근이 필요
  - 'UN 북한인권결의안' 주도적 추진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인권 범죄를 기록하고 처벌하는 조치를 강구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개)」, 「북한인권법(개)」, 「출입국관리법(개)」,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금지법(제)」**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한반도 진짜 평화

#북한 #남북협력기금

05 '묻지마 퍼주기식 남북협력기금'의 국민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 2020년도 예산 날치기로 남북협력기금 1조 2056억원 확정, 전년 대비 9% 증액
  - 철도도로연결 사업(4289억원 → 4890억원), 산림협력 사업(1137억원 → 1275억원) 증액시켜 비핵화와 무관한 퍼주기식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계획 중

약속

남북협력기금 국민통제 강화

- ▶ **'북한 퍼주기 방지 3법' 국회 통과로 굴욕적 · 일방적 퍼주기 차단**
  - 남북협력기금 국민 몰래 퍼줄 수 없도록 국회에 견제 장치 마련
- ▶ **남북협력기금 등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예산에 대한 국회통제를 강화**
  -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 폐지하여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산 · 결산 심사를 받도록 제도 개선
- ▶ **「남북협력기금법(개)」, 「남북교류협력법(개)」, 「남북관계발전법(개)」**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한반도 진짜 평화

#남북협력
#북핵폐기

06 북핵 폐기 이후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 북한 비핵화와는 무관하게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북핵 폐기 이후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자유시장경제 기반 하의 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정책 필요

약속

북핵 폐기 전제로 남북교류협력계획 수립

▶ **북핵 폐기를 전제로 자유민주통일을 위한 단계적 남북상호개방 정책 수립 추진**
- 국회 특별위원회로 '남북교류협력 비전위원회' 설치하여 북핵 폐기 이후에 대비한 교류협력 장기 계획 수립 추진

▶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민간 주도의 남북경협계획 수립**
-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이 원하는 남북경협 방식에 대한 조사·연구 추진
- 개성공단·금강산 이외의 경제·관광특구 개발계획에 대한 민간 공모 추진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한반도 진짜 평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

07 이산가족, 납북가족, 국군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치유하겠습니다

현재

▶ 대북 굴종적 자세로 북한 퍼주기 위한 남북교류사업만 추진될 뿐 이산가족, 납북가족, 국군포로가족의 분단의 고통 치유를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

▶ 이산가족상봉 신청자 133,370명 中 4,000명만이 일회성 상봉에 그쳤고, 국군포로 563명과 납북자 517명 역시 北의 무성의한 태도로 미귀환 상태
-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시급한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

약속

분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아픔 치유

▶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 요청 및 송환 공식 요구**
- UN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해결 방안 추진

▶ **이산가족 분단 고통 치유 정책 수립 및 발전**
-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수시상봉, 서신왕래, 고향방문 등 다각화 노력

▶ 6.25전쟁 발발 70주년 계기, 전시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위로 추진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한반도 진짜 평화

#안보
#북핵폐기
#국방

08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남북정상회담(3회)과 미북정상회담(3회)이 있었지만 북핵 폐기를 위한 진전은 없음
-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대남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음

▶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로 우리의 군사력만 무력화되었음
- 북한은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여 발사하고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군사합의를 이미 백지화시켰음

약속

북핵·미사일 군사대응태세 구축

▶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전략을 확대시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군사적 억지력 강화
- 한미동맹을 '핵동맹(핵공유협정 체결)' 수준으로 격상시켜, 미국의 핵전력 한반도 주변 배치,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작권에 미국 핵전력 공동 운영 권한 포함 등 추진
-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조기 구축 완료
- 유사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한미연합작전계획 수립

▶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관계 복원
- 한미일 공동 '북한핵위협검토보고서' 작성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한반도 진짜 평화

#한미동맹
#북핵폐기
#전시작전통제권
#안보

09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 고조되는 안보 위기를 무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강행
- 과거 어느 때보다 한미군사동맹이 불안정하여 전작권 전환 강행은 한미대비태세 약화 초래

약속

북핵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국회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 철저한 검증
-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국방예산 철저 심의

▶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동북아군사전략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주도하여 한미 의회 차원의 비준동의 절차 마련

▶ 한미간 합의된 전환 3대 조건
-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대응 능력 확보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한반도 진짜 평화

#남북군사합의폐기
#안보

10 북한이 백지화시킨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하여 무력화된 국방력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 이후 전방에 배치된 우리 군의 질적 우위 능력이(정찰 및 감시) 무력화됨

– 북한이 백지화시킨 합의를 문재인 정권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더 심각한 안보공백을 자초하고 있음

약속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 북한이 더 이상 이행하지 않는 남북군사합의 폐기

▶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의 책무 강화

– 새로운 유엔안보리결의안 추진, 유사시 전력제공국가 확대 등

▶ 서해 NLL 지역 어장 보호를 위한 해군 및 해경 경계태세 강화

내 삶을 디자인하다

책임 국방

◆군인 정년 연장과 현역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예비군 훈련 수당 인상 및 전역군인 재취업 지원 강화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영예로운 국가 책임 보훈 실천

#군인 #국방 #군복무기간

01 군인 정년 연장과 현역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 출산율 급감으로 병역 재원 부족, 선진국 대비 짧은 군정년으로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
- 장병복무여건 개선이 지연되어 현역병의 전투력 약화 우려 증대

약속

군인 정년 연장과 현역 장병 복무 여건 개선

- 대령 이하 장교 및 준·부사관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연장
  – 임금피크제 적용 추가 연장
- 현역병 복무 임무와 환경을 고려해 복무기간을 공정하게 재설계
- 현역병 '외출, 외박, 정기휴가 규정' 개정과 실전 전투력 강화를 위한 '현역복무프로그램(입대~전역)'을 수립하여 매월 정기 외박 실시
- 현역 복무 시 습득한 전문 능력을 전역 후 취업 시 인정 받을 수 있는 '(가칭) 직업능력인증제' 마련
- 현역병 비전투분야 근무 최소화 위한 민간인 채용 확대
- 위험 업무 수행 및 위험 지역 근무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수업무 수당 대폭 인상
- 국군 장병들이 훈련 등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민간진료 선택범위 확대
- 「군인사법(개)」 등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책임 국방

#국방
#예비군
#군인

02 예비군 훈련 수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전역 예정 군인에 대한 재취업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예비군 훈련수당이 최저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정예 예비군 육성을 위한 정상적 훈련실시가 불가능한 상황
– 민주당의 2020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미래통합당이 추진한 인상안이 무산됨

▶ 유사시 전방지역 전투에 투입되는 동원사단에서 한국전쟁 시 사용했던 배낭, 헬멧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

약속

예비군 훈련 수당 인상 및 전역군인 재취업 지원 강화

▶ 동원 예비군 훈련 수당 최저임금 100% 수준(240,500원)으로 인상
– 지역예비군훈련 참여 시 지급되는 교통비와 급식비 공무원 여비 수준으로 인상

▶ 동원사단에 배치된 노후 장비 및 물자 현대화
– 전방사단과 동원사단의 물자 및 무기 전력화 시기를 동일하게 조정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무상 건강 검진 및 건강 교육 실시

▶ 전역 예정 군인 전직지원기간을 2배로 연장하고, 전직교육 시작시기를 기존 전역 '1년 전'에서 '2년 전'으로 조정
– 복무기간 5~7년 미만은 기존 1→2개월 / 7~9년 미만은 기존 2→4개월 / 9~10년 미만은 기존 3→6개월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책임 국방

#국방
#해킹방지
#안보

03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현재

▶ 스마트폰 일상화, 생산시설 자동화 등으로 전산업·생활 영역에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사이버 영역 확장에 따라 보안 수요, 중요성도 증대
– 그러나 정보보안 콘트롤타워 부재, 법령 미비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요원

▶ 국내 보안업계는 기술 수준과 시장 규모가 모두 외국과 대비해 매우 열악하며, 양자암호 등 일부 선진기술을 보유한 분야마저도 경쟁력이 저하상태

약속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및 범부처 콘트롤 타워를 구축
– 행안부(경찰청), 과기부, 국정원 등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책본부' 및 대통령에게 국가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역할 부여

▶ 국내 정보보안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통신망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양자암호 등 차세대 보안산업의 진흥체계 마련을 초연결로 대표되는 5G 통신망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 마련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개)」

04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실천하겠습니다

#보훈
#수당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현재

▶ **보훈 제도개선을 위한 사항들이 예산 우선순위 등 국가재정과 충돌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요구사항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예산 확보 후 시행령 반영 등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보상체계로 보기 어려움

▶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에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만 75세 기준으로 위탁병원 감면진료가 제한적으로 이용, 특히 위탁병원 부족 및 원거리 이용에 따른 불편함과 의료비 부담

약속

영예로운 국가 책임 보훈 실천

▶ **보훈 급여금(보상금, 수당)의 합리적 지급 시스템으로 개선**
- 전체 예산 대비 1.1%대인 보훈예산 비중의 단계적 확대
- 대상자별 적정 보훈 보상 목표치 설정 및 이에 따른 예산 반영과 집행의 합리적 지급체계 마련
- 보훈급여금 병급(이중지급) 금지제도 개선 및 전상 수당(20년기준 : 23,000원) 등 각종 수당의 합리적 인상 추진
- 보상금, 수당 등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기초연금 등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

▶ **6.25 참전명예수당 현행 32만원 → 50만원 이상으로 인상**
-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으로 입법화

▶ **위탁병원 의료 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으로 확대, 의료 접근권 강화 및 비용 부담 완화**
- 참전유공자 등 만 75세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하여 위탁병원 감면 진료 대상자 확대
-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용 지원
-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위탁병원 확대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개)」**

든든한 외교

◆재외국민 권익 신장 적극 추진

◆공공외교 지원 강화

◆적극적인 외교로 코리아포비아 극복 및 재외국민 보호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든든한 외교

#외교
#재외국민

01 재외국민 권익 신장을 적극 추진하고 국경 없이 국민을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 250만 재외국민 시대에 걸맞는 재외국민 편익 증진 요구 수요 증가

▶ 해외이주, 유학 등 장기체류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객 및 '한 달 살기' 열풍 등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해외 재난발생 시 대처 미흡

약속

재외국민 권익 신장 적극 추진

▶ **재외국민 대상 대형 사건사고 · 해외재난사고 전담 '(가칭) 해외재난안전대책본부' 설립**

– 해외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범정부적 콘트롤타워 설치 및 신속한 예산 집행 근거 마련으로 대처능력 확보

▶ **재외국민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가 간 협정 확대 추진**

– 해외에서의 발생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 위해 조약 체결국 확대 추진

▶ **재외동포 민족교육 강화를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 추진**

– 정부 예산 지원 요건 완화(최소학생수 기준 10명 → 5명)하여 소규모 한글학교 설립 증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 「재외국민영사조력법(개)」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든든한 외교

#공공외교
#해외원조

02 누구나 공공외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21세기 국제사회는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공외교 증진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를 지향하고 있음
- 문재인 정권은 당면한 외교 현안 해결에 매몰 된 외교 전략을 벗어나지 못해 공공외교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부재한 상황

약속

공공외교 지원 강화

-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K-Pop + ODA' 전략 수립 및 추진**
  - 글로벌 차원의 인기가 높은 K-Pop을 통해서 한국형 ODA의 전략적 우위 모색
- **청년층 및 퇴직 전문가 KOICA 해외봉사단 참여 대폭 확대**
  - 한중일 대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개도국 지원 해외봉사단 출범
  - 우수 복무 병사 전역 시 KOICA 해외청년봉사단 참여 지원
- **공공외교 전문 인력 양성 확대**
  - 공공외교 역량강화 시범대학 현재 8개 대학을 16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기회 부여
- **'생활체육' 해외 전파 사업 추진으로 공공외교 기능 확대**
  -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국내 활성화된 생활체육을 개도국에 보급·확산
  - 생활체육지도자 해외 파견 및 관련 산업 진출 여건 조성
- **공공외교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
  - 공공외교를 통한 해외 시장 확대 및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 내 전담직 신설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 든든한 외교

#우한코로나19극복
#외교

03 세계10위권 경제대국, 세계 속의 대한민국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외교역량 부재로 대한민국의 외교와 경제지도는 급격히 축소
  -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비지니즈 등 타격과 교민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 '코리아포비아' 현상이 증대

약속

적극적인 외교로 코리아포비아 극복 및 재외국민 보호

- **외교부와 현지 공관과 조직, 인력을 총동원한 24시간 비상 외교 체제 수립**
  - 세계 각국의 제한조치들에 대해 실시간 파악하여 대국민 공지, 당사국들과 긴밀한 소통으로 자국민 보호와 경제활동을 적극적 지원
- **전염병 창궐과 같은 신안보(Emerging Security)이슈도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
- **「국가안전보장회의법(개)」**

미래통합당 줄긋기

행복으로 가는 정답지를 만들어 보아요!

위에서 아래로
혹은 옆에서 옆으로
흔히 시험 답안지 따위에서 잘못된 답을 표시할 때
우리는 비스듬히 줄을 긋습니다.

2020. 4. 15에도
잘못된 답에 줄을 그을 것인가요?
문제의 답에 행복의 줄을 그어 보세요
정답을 통해 나오는 숫자엔 분명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번호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혁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힘을 믿습니다.

왼쪽 질문이 뜻하는 단어를 오른쪽에서 찾아 선으로 이어주세요!

제 21대 국회의원 행복 투표 용지



묵은 조직이나 제도·풍습·방식 등을 바꾸어 새롭게 하는 일을 뜻하는 단어는?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치거나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단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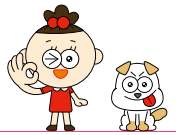
정당 또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행동지침을 뜻하는 단어는?

혁 신

통 합

정 책





04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우리는 희망의 피켓을 듭니다
행복 피켓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부터 어른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육아를 위해 이제는 은퇴하셔서 편하게 쉬셔야 할 '할마', '할빠' 까지 육아전쟁에 참전하시게 만들어 자식 된 도리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은 행복을 꿈꿉니다. 주말이면 운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싶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어 힘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이 모두 웃게 해줄 공약을 미래통합당에게 요청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워킹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희망은 '가족행복' 입니다



민심과 미래통합당이 만들어가는 가족행복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수많은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우리 가족과 이웃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한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에도 걱정없는 보육시스템을 만들고, 어린이 행복, 청년희망, 여성안심, 어르신 기쁨이 넘치는 행복 공동체를 펼쳐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함께하는 세상에서 배려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지원,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일원화, 자영업자 · 은퇴 · 실업자 건강보험료 인하, 독감 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실시, 왼손잡이 보호, 반려동물 지원 확대 등 국민을 현혹하는 퍼주기 공약이 아닌 실천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핀 '진심 복지 공약'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 이웃 우리 가족 행복

- ◆국가 재난에도 든든한 안심 보육 조성
- ◆어린이집 급식비 2배 인상
- ◆어린이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 환경 개선
- ◆실종아동 제로사회 만들기
-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상향하여 교통비 지원
- ◆반려인 · 반려동물 지원 확대
- ◆양육비 불이행 국가 책임 강화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우리 가족 행복

#어린이 #우한코로나19극복 #보육 #감염병방지

01 '우한코로나19(국가재난)' 대응할 수 있는 안심보육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현재

▶ **우한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 휴교 사태가 이어져 많은 맞벌이 가정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 직면**

– 특히, 개별적으로 돌봄 인력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돌봄 인력들의 중국 방문이력 등 감염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어 불안이 증폭, 현행법상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 감독은 소관부처가 전무해 방역 사각지대 존재

약속

국가 재난에도 든든한 안심 보육 조성

▶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가칭)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 민간 베이비시터를 '육아도우미' 업종으로 정의, 정부가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의 정보를 통합데이터베이스에 등록

▶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를 도입**

– 감염병, 자연 재해,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교육 혹은 보육 시설이 임시 폐쇄되거나 보육인력이 임시 휴무 조치될 경우,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의무화

▶ **「아이돌봄지원법(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우리 가족 행복

#어린이
#어린이집
#보육
#급식

02 어린이집 급식비를 공공기관 어린이집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재

▶ 멀건 된장국, 작게 조각낸 과일, 새 모이 급식 등은 어린이집 부실급식이 언론에 보도 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문구임
- 정부가 정한 하루 최저 급식비와 간식비는 아동 1인 1일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 1,745원으로 두 번의 간식과 한 번의 식사를 운영
- 2020년 1,900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쥐꼬리 증액으로 실질적인 급식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움

▶ 서울시청 어린이집은 1일 1인 5,700원, 청와대 어린이집은 3,800원, 정부부처의 어린이집도 3,000원대 수준으로 운영되는 등 공공기관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기준보다 2~3배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더욱 큰 상황

약속

어린이집 급식비 2배 인상

▶ 어린이집 하루 급식비 공공기관 수준으로 인상
- 어린이집의 하루 급식비를 현재 1,900원에서 공공기관 어린이집 수준(3,800원)으로 인상

▶ 표준보육비용 공표를 의무화
- 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표준보육비용 공표를 의무화하고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법제화

▶ 「영유아보육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우리 가족 행복

#어린이
#공중화장실

03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아이 눈높이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로 보는 화장실은 여러가지가 불편
- 우리 아이들의 어깨보다 높은 세면대, 아무리 뻗어도 닿지 않는 거품비누통, 엉덩이가 빠질 것 같은 큰 좌변기, 머리위에서 부는 핸드드라이기를 매일 같이 경험

▶ 복합문화시설의 경우 가족화장실이 늘어나고 있지만 1곳인 경우가 많아 대소변을 참기가 어려운 우리 아이들은 성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유아 부모들의 불편함 해소와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 보장

약속

어린이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 환경 개선

▶ 우리아이 눈높이 화장실 만들기
- (공중화장실 신규 건립 시) 아동 전용 낮은 세면대 설치 또는 수전 위치 변경
  아동용 좌변기 · 소변기 설치, 아이 키에 맞춘 핸드드라이어 설치 등
- (기존 공중화장실의 경우) 아이용 세면대 발판 비치
  보조좌변기 및 변기디딤대 비치, 핸드드라이어 위치 변경 등

▶ 남녀화장실 모두 유아 돌봄이 가능하도록 '우리아이 눈높이 화장실' 동일하게 추진

▶ 유모차 출입이 가능한 '가족화장실' 확대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우리 가족 행복

#어린이
#실종아동방지

04 실종아동 제로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

– 2019년 8월 기준 유전정보는 총 36,050건이고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20,341건으로 그 비율이 56.4%에 달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실종아동 등이 가족을 만난 건수는 총 137건으로 그 중 22건이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이용한 것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떠넘기기 때문에 무연고 장기 실종 아동들의 신상카드 약 9만건이 전산화되지 못하고 서류 더미에 방치

약속

실종아동 제로사회 만들기

▶ 실종아동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유전정보 보존 원칙 (10년 경과시 폐기 규정 삭제)

▶ 전국 아동보호시설 입소카드 및 지자체 등에 보관 중인 폐쇄된 시설의 아동 신상카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전산화 시행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우리 가족 행복

#어린이
#성범죄방지

05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해 「조두순 방지법」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 2020년 12월,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과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음

▶ 또한,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고 2020년 '조기'출소를 앞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주취감경 폐지요구가 빗발치는 상황

약속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 일명 「조두순방지법」 마련

–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

▶ 아동 · 청소년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성범죄자 체류 금지 강화

– 현행법상 접근금지 범위를 현행 100미터에서 2km로 확대하고,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반경 5km 거주 제한

▶ 아동 ·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 등에 대한 감경 규정 특례 폐지

▶ 해바라기센터와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 · 청소년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지원 확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우리 가족 행복

#가족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저출산

06 난임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예산 150조원.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은 0.98 기록
-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서도 정부의 난임지원은 소득, 횟수, 나이 등에 차별
- 난임인구 20만명 시대로 난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 필요
- 20만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약속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 **난임시술 지원 횟수제한, 소득기준, 연령차별 폐지**
  - 난임시술 횟수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
    (현재, 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 5회까지 건보 적용)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현재, 2인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만 적용)
  -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기준 폐지
    (현재, 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 5회까지 20만~110만원 지원)
  - 연령초과자에도 차별없이 동등하게 지원
    (현재, 만45세 이상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별)
- **단계적으로 본임부담 제로**
  - 시술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높여 본인부담 제로화
- **남성 난임에 대한 지원 확대**
  -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남성 난임 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
- **「모자보건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우리 가족 행복

#가족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07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을 상향하겠습니다

현재

- **현재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
  - 임신 1회당 60만원, 쌍둥이의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
    분만 후 1년까지 사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의 사용처가 너무 협소하게 설계되어 있어 사용처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큰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임산부의 편안한 이동권 지원**
  - 현재 대중교통 중심으로 임산부 배려석이 운영되고 있지만, 출·퇴근 지하철 현실과 임산부가 겪게 되는 입덧, 만삭시기를 고려하여 보다 임산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함

약속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상향하여 교통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을 현재 60만원에서**
  ⇒ 100만원으로 상향 (쌍둥이의 경우 100 → 14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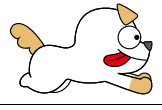
- **국민행복카드 통해 임산부에게 택시비(교통비, 주유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택시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 자가용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주유비 지원

08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족
#반려동물
#동물병원
#유기견

현재

- 현재 대한민국은 반려동물 보유 인구 1천만 시대로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으로 삶의 소중한 부분을 차지
  -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도 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28%인 1400만 명이 반려인이지만 매년 20만 마리가 유기되는 현실에도 직면
- 반려동물 진료 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아 진료 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의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동물보호 담당부서도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며 혼란이 가중
- 반려동물 등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탓에 손해율 관리는 물론 보험료 산출도 쉽지 않은 실정
- 기존 유기견 중심에서 반려동물 및 반려인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필요



약속

반려인 · 반려동물 지원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용 등 조세지원 확대
- 동물보호센터 · 펫시터 확대로 '명절 반려견 돌봄 쉼터' 지원 추진
  - 유기견 입양 가정, 저소득층 가정 우선 지원
- 동물 기초의료서비스 지원 위한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과 동물 경찰제 확대
-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원 지원 및 유기견 보호기간 30일로 연장
- 펫티켓 교육(초등학교 대상 동물을 키우기 위한 준비 교육) 실시
- 반려동물보험 부담감소 위한 정책보험제도 도입 추진
- 반려견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규정 재검토와 개사육농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폐업지원
- 「수의사법(개)」, 「동물보호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우리 가족 행복

#어린이
#양육비

09 양육비 불이행,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11.5%에 불과

▶ 비양육자가 지급의지가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강제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고, 특히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없음

약속

양육비 불이행 국가 책임 강화

▶ **국가책임 양육비 지급 방안 마련**
– 법무부, 국세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등과 연계한 혁신적 양육비 지원체계 구축

▶ **악의적·고의적 상습적인 양육비 채무자, 운전면허 일시 정지 제재**
–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일시적 운전면허 정지 제재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개)」, 「양육비선지급제(제)」

내 삶을 디자인하다

행복한 우리 가족, 이웃 청년 희망 약속

-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 ◆민간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 벤처생태계 조성
- ◆청년 농업인력 양성
- ◆청년·신인 예술인 문화마켓 조성
- ◆청년 문화패스 신설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청년 희망 약속

#청년 #채용청탁저지 #고용세습방지 #귀족노조저지

01 대한민국에서 채용청탁과 고용세습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현재

▶ 부정 채용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및 「채용절차법」이 마련되었으나, 처벌규정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머물러 실효성 제고가 필요

▶ 서울교통공사 등 일부 대기업 및 공기업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를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도록 노사 간에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공정한 채용질서를 교란하여, 청년 구직자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

약속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 청년이 참여하여 공정한 채용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당과 제21대 국회에 설치

▶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 채용청탁 시 처벌 강화
- 채용강요 행위 등 채용부정에 대해 엄벌 조치
- 공기업·공공기관의 채용비위 등에 대한 현행 징계시효(3년) 규정 연장

▶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

▶ 「청탁금지법(개)」, 「채용절차법(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개)」, 「지방공기업법(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청년 희망 약속

#청년
#일자리
#최저임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02 기업의 활력을 살려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권의 '기업 옥죄기' '소득주도성장' 등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민간 경제는 침체수준

– 문재인 정권의 경직적인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제도로 기업경영 어려움이 가중, 새로운 고용환경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초래

▶ 문재인 정권은 최근 청년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 재정이 투입된 세금 주도 '초단기 임시직'에 불과

약속

민간 청년 일자리 확대

▶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유연근로제 확대로 기업의 활력을 살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최저임금을 업종별 ·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고,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키고, 결정주기도 2년으로 확대 등 기업 경영 안정성 제고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반대로 국회에 9년 째 발목 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자리 관련법 처리와 발굴에 역점

▶ 「최저임금법(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청년 희망 약속

#벤처기업
#일자리
#청년
#스타트업

03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청년 벤처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 경직된 벤처생태계로 인해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각종 규제로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되어 벤처기업 성공이 매우 어려움

▶ 벤처기업의 성공확률은 매우 낮지만, 실패를 경험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 더 발전된 기업으로 퀀텀점프 할 수 있음

▶ 벤처기업 종사자들은 기존 기업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근무 중 복지와 퇴직 이후 안정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 필요

약속

청년 벤처생태계 조성

▶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 지원

–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근로상담, 복지, 노후 지원을 강화

▶ '창업재도전지원위원회' 구성

– 성실 실패자에게 정부의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멘토링과 기술인력 매칭으로 벤처 성공의 디딤돌 마련

▶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보장

– 필요한 만큼 일할 수 있게 주 52시간 예외 적용 추진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

▶ 「근로기준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청년 희망 약속

#청년 #농업 #농촌 #일자리

04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하여 농업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현재

▶ 2018년 기준 전체 농가 102만호 중 만 40세 미만 농가는 7,600호로 전체 대비 1%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의 고사 위기도 제기되고 있어 후계농과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성이 증대

▶ 농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외국인 고용이 어렵고, 농산물가공 및 유통센터 등 농업계 전반의 위기가 가중되어 숙련근로자가 이탈되는 등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약속

청년 농업인력 양성

▶ **청년창업농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 영농정착 지원금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월 100만원씩 지급
-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 **후계농 및 청년농민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인 농지임대 확대**
-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금리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

▶ **상속세 감면조치로 청년의 농업 가업승계 장려**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안(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청년 희망 약속

#청년 #문화 #예술 #일자리

05 청년·신인 예술인들의 '문화마켓'을 만들고 '예술인 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 **정부 차원의 각종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도 청년 예술인들의 생활 환경 여전히 어려움**
- 2018년도 기준 예술인 연간 수입 1,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2.7%, 수입이 없는 경우는 28.8%

▶ **청년 신인 예술인들에게 보조금 지급 등 단편적이고 시혜적인 행정 지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활동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생활고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

약속

청년 · 신인 예술인 문화마켓 조성

▶ **청년 · 신인 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영 예술품 유통 플랫폼인 '문화마켓' 개발**
- '문화마켓'은 온 · 오프라인 예술품 전문 유통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청년과 신인 예술가 작품이 활발히 유통될 수 있게 지원
- 전국 주요 기차역, 공항,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에 청년 예술인 작품 전시 공간과 메이커 스페이스 등 거점매장 운영
- '예술작품은행 설립'하여 청년과 신인작가의 작품 임대 사업 활성화

▶ **전국 거점별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과 사업 활동을 하고, 해당 지역을 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해 뉴욕의 소호(Soho)와 같이 유명한 예술 · 문화 · 관광 특별 지역으로 조성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청년 희망 약속

#청년 #문화 #체육 #관광

06 문화·체육·관광을 결합한 '청년 문화패스'를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철도 할인 패스 제도와 일부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 할인 이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통합해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년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약속

청년 문화패스 신설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이용 혜택을 결합한 '청년 문화패스'의 신설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와 휴식이 있는 삶 지원

– 만 18세 ~ 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문화·체육·관광 패스 제도 전면 시행

– 국·공립 대상 기관 전시와 공연에 한해서 할인 혜택 기능만 있었던 기존의 '문화패스'와 교통수단 할인혜택 위주의 '철도패스' 및 '지역별 관광패스'의 기능을 결합해 사용 분야와 할인 혜택을 전국 단위로 통합·확대

▶ 주요기능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주요 유적지 무료 입장 확대

– 사립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테마파크 입장 및 이용 할인

– 주요 스포츠 경기 관람 할인, 스포츠 체험시설 이용 할인

– 기차, 고속버스 등 주요 교통 할인패스와 기능 통합

– 주요 관광지 음식점 할인 혜택

▶ 「문화예술진흥법(개)」, 「국민체육진흥법(개)」, 「관광진흥법(개)」

내 삶을 디자인하다

행복한 우리 가족, 이웃 여성 안심 약속

◆ 여성범죄 안전망 확충

◆ 여성 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마련

◆ 경력단절여성 예방 사업 지원 확대

◆ 여성일자리 새일센터 개선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여성 안심 약속

#여성 #안전 #성범죄방지 #데이트폭력방지 #몰카범죄방지

01 신종 여성범죄 방지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

▶ **정부의 신종성범죄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2018년 7월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3회 이상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가해에 대해 정식기소)가 도입되었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3번씩이나 위험에 노출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제기

약속

여성범죄 안전망 확충

▶ **데이트 폭력범죄에 강력 대응을 위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

–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데이트폭력행위를 제지·격리 조치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피해자 거주 지역의 접근 금지의 '임시 조치'와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등 피해자 지원 제도 강화

▶ **경범죄(벌금 10만원)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

▶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대상에 포함**

– 영상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제도적 지원

▶ **몰래 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카메라(초소형카메라) 관리제 도입**

▶ **「데이트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지원특별법(제)」, 「스토킹방지특별법(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 「변형카메라의관리에관한법률안(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여성 안심 약속

#여성
#안전
#1인가구

02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 2019년 기준 여성 1인가구는 291만명으로 매년 증가, 전체 1인가구의 50.8%.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20~24세 여성 1인가구는 같은 연령의 남성 가구보다 1.7배가 많은 상황

▶ 작년 5월, 서울 신림동 한 원룸 건물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집을 뒤따라가 현관문으로 침입하려 한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1인가구가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관련 대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 통계조차 없는 실정

약속

여성 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마련

▶ 여성 1인가구에 '스마트 안심세트' · '성범죄자 알림문자 서비스' 지원
- 여성 1인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방범장치를 위한 '스마트 안심세트' 지원
- '성범죄자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 현재 성범죄자가 인근 지역에 전입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안내하고 있는 '우편 고지 서비스'를 1인 여성가구에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고지를 위해 '문자 서비스'로 개편

▶ 여성 1인가구 범죄통계시스템 구축
-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에 '여성 1인가구 대상의 범죄통계'를 신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치안 대책 마련

▶ 「여성폭력기본법(개)」, 「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여성 안심 약속

#여성
#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03 경력단절여성을 예방하겠습니다

현재

▶ 2018년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69만 명에 육박하며 일을 그만둔 사유로는 육아, 결혼, 임신 및 출산, 가족돌봄 등으로 조사
-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8.4년

▶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 유인책이 미비
- 현재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을 위한 세재혜택 제도는 엄격한 요건과 미비한 공제율로 인해 실제 세액공제 규모는 2018년 4,000만원, 2019년 2억원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상황임

약속

경력단절여성 예방 사업 지원 확대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재지원 대폭 확대
-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요건 완화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요건 완화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 대폭 상향
- 현행 중소 · 중견기업 70만원 → 100만원

▶ 경력단절여성 고용률을 달성한 중소 · 중견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지원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여성 안심 약속

#여성
#일자리
#새일센터

04 엉터리 여성일자리 새일센터,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현재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인 '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취업률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매년 하락

▶ 새일센터의 저조한 사업 실적으로 질 낮은 여성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 제기

약속

여성일자리 새일센터 개선

▶ **전국의 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 창업지원센터 등에 '1:1 커리어코칭' 프로그램 도입**
- 센터별 전문 취업상담사를 최소 1인 배치
- 경력단절여성 뿐 아니라 이직을 준비하는 여성에게도 '1:1 커리어코칭' 프로그램 지원
- 고부가가치 분야별 전문멘토가 핀셋 코칭할 수 있도록 개선

▶ **권역별 가칭 'IT 거점센터'를 지정해 코딩 교육 등 IT 관련 교육 프로그램 대폭 신설**
- 4차산업혁명에 맞는 여성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으로 여성고용 안정화



내 삶을 디자인 하다

행복한 우리 가족, 이웃 어르신 든든 약속

- ◆민간형 노인일자리 두배 확대
- ◆국민연금 개혁 방안 마련
-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 스마트 밴드 보급
- ◆어르신 골다공증 무료검사 실시
- ◆'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 신설
- ◆'(가칭)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 신설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어르신 든든 약속

#어르신 #일자리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01 진짜 노인 일자리를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현재

▶ **정부가 재정을 쏟아 만드는 노인일자리가 2020년 74만개로 늘어나지만, 이 가운데 73.4%인 54만개는 월평균 27만원 받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 평균 보수가 30만 ~ 170만원인 '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17.6%인 13만명에 불과

– 전체 노인일자리 중 '민간형 일자리' 비중이 2018년 20.8%였던 반면, 2020년은 17.6%로 3.2%p 하락

▶ **문재인 정권은 단순히 고용지표 개선만을 위해 묻지마식 재정을 투입해 '공익활동형 일자리' 만 만들어 내고 있음**

– '공익활동형 일자리' 는 '쓰레기 줍기', '학교 급식 지원' 등 단순 업무가 많고 근무시간(월평균 30시간)이 짧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짐

–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는 '민간형 일자리'는 노인의 경험과 역량에 기반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진짜 일자리로 평가됨

약속

민간형 노인일자리 두배 확대

▶ **진짜 노인일자리인 '민간형 일자리' 2배(26만개)이상 확대**

– 시장형사업단 지원단가를 연 267만원에서 단계적 인상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지원 확대**

▶ 「노인일자리지원법(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어르신 든든 약속

#어르신
#국민연금
#노후

02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지켜내겠습니다

현재

▶ 2019년 7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700조원에 육박하지만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재정 고갈 예상

▶ 연금개편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례없이 4지선다형 여론조사 수준의 개편안을 제시해놓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는 식임

▶ 문재인 정권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개편에 대해서는 뒷전인 채 국민의 노후자금을 가지고 관치, 연금사회주의가 우려되는 스튜어스십 코드 이행에만 집중

약속

국민연금 개혁 방안 마련

▶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설치 개편안 마련
-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적정 연금보험료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등을 개정하여 국민 부담이 급속히 늘지 않도록 단계적 조정 방안 마련

▶ 국민연금 운용 수익 최대화로 국민 부담 축소
-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과 인력 강화
-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엄격 제한 등

▶ 「국민연금법(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법률(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어르신 든든 약속

#어르신
#건강
#예방접종

03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대상포진은 오래 방치하면 출산보다도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공포의 질병
- 면역력 약화가 발병의 주원인이라는 점에서 어르신들에게 특히 취약한 질환임에도 고액의 접종비 부담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접종을 못하고 있는 사이 대상포진환자 수는 크게 늘어 지난해에만 73만 여명이나 발병

▶ 폐렴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 사망원인 상위 3개 질병에 속하는 심각한 질환
- 2004년 사망원인 10위였던 폐렴이 고령화로 그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어르신 대상 확실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

약속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 비용부담이 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 실시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에 효과가 좋은 13가까지 포함하고, 동네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개선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어르신 든든 약속

#어르신 #장애인 #스마트밴드

04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겠습니다

현재

▶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어르신 고독사 수는 약 300건에 달하고 있으며, 노인자살률이 노인 10만명당 72명으로, OECD국가 중 1위

▶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상황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응급상황을 지인 및 가족 등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밴드를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에게 보급하여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전환이 필요

약속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 스마트 밴드 보급

▶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밴드 보급**

–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밴드)'가 맥박 수, 체온, 수면, 활동량 등의 정보를 지인 또는 가족에게 송수신하여 비상 및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처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어르신 든든 약속

#어르신 #건강 #건강검진

05 어르신 뼈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현재

▶ **노년기 만성질환 중 골다공증 질환은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축시키는 '건강 악순환'의 주범**

– 골다공증은 '골절'의 원인 질환이 되며, 50세 넘어 '고관절 골절'이 되면 6명 중 1명이 1년 내 사망하는 등 심각한 건강문제 발생

▶ **현재, 골다공증 진단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는 만 54세, 66세 여성에 한해서 실시**

–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는 참여도가 낮아 70대 이상 노인 중 여성은 27.7%만 스스로 골다공증을 인지

– 노년기 남성도 6.6%만 골다공증을 인지하고 있는 등 치료 사각지대에 방치

약속

어르신 골다공증 무료검사 실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골밀도 검사 무료실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골밀도 무료 검사 진행

▶ **골다공증 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 골다공증 진단 후 최소 3년 동안 약물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처방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르신들의 치료비 부담 완화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어르신 든든 약속

#어르신 #건강 #체육

06 '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 신설로 어르신 건강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와 스포츠 관람 이용권이 지원되고 있으나, 어르신 대상으로는 미지원

▶ 2026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됨에 따라 노인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예상
- 노인의 89.2%가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노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 필요

약속

'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 신설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 중 약 20만명에게 '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 지원 신설
- 스포츠 강좌 수강, 스포츠 시설 이용 및 기구 대여, 스포츠 관람 등을 보다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어르신 이용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관련 시설 증대, 인력 확대
- 현재 어르신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 스포츠 강좌에서 종목 다양화, 이용 가능한 유료 스포츠 종목 확대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어르신 든든 약속

#어르신 #여성 #일자리 #보육

07 '(가칭)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 신설, 시니어 여성일자리 3만명 창출하겠습니다

현재

▶ 111만 명에 가까운 영유아가 혈연, 비혈연을 포함한 보육 인력의 양육을 받고 있지만 인력의 전문성은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
- 작년 금천구 정부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킨 것처럼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정부 아이돌보미'의 자격관리는 매우 무실한 상황
- 일부 민간 기관에서 발급되고 있는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 역시 그 관리가 매우 허술함

▶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전문 보육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가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됨

약속

'(가칭)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 신설

▶ '(가칭)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을 신설, 전문 보육 인력 일자리 3만명 창출
-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해 보육에 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 부여
- 그동안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현장의 보육인력을 양성하고 처우 개선

▶ '보육전문사 관리기관'을 신설해 보육전문사의 국가시험과 결격사유, 자격취소, 보수교육 등 자격 관리 강화

▶ 「아이돌봄지원법(개)」

행복한 우리 가족, 이웃 우리 이웃 배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필수적 장애인 지원제도 개선

◆「왼손잡이기본법」 제정

◆근로형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예산 확대 및 사회복지사 급여 현실화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우리 이웃 배려

#이웃 #북한이탈주민

0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더 많은 북한주민을 자유의 품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현재

- ▶ 한성옥 모자 아사 사건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 노출
- ▶ 생계곤란 등 남한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재입북 사례 발생
- ▶ 탈북 비용 상승 및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 탈북저지 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 숫자 급감 추세
  - – 2009년 : 2,914명 → 2019년 : 1,047명 (18년 만에 최저치 기록)

약속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 ▶ 정부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의무 명문화
- ▶ 제3국 출생자녀의 제도적 차별 개선
  - – 양육가산금, 교육지원금 등 차별 없도록 제도 개선
- ▶ 북한이탈주민의 신이산가족화 방지를 위한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
  - – 선배 탈북민과 연계된 '멘토링 시스템' 구축 및 창업지원센터의 권역별 설치·운영
- ▶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 – 친정부 성향 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단체에 골고루 지원
- ▶ 정착지원금 확대로 탈북 유도 (현행 1인 세대 기준 800만원 → 1000만원)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개)」

#장애인
#이웃

02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부분부터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는 문제 발생**
- 국가인권위에서도 대책마련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연구용역 예정이라며 사실상 방관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급감하는 상황 조속한 개선 필요

▶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500㎡ 미만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음.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접근성 기준 적용 필요**

▶ **장애인콜택시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등급제 폐지로 서비스 대상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확대 증차 필요**
- 지자체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과 이용요금, 운영시간 등을 제각기로 운영, 불편함 해소 필요

▶ **시청각 장애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의료 접근성도 열악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뇌전증 환자는 발작 등이 나타나는 질병의 특성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음**
- 뇌전증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지원 및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약속

필수적 장애인 지원제도 개선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 현재 만 64세까지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단계적 폐지

▶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300㎡~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
- 지자체별 다른 요금과 운영시간 등을 통일
- 저상버스 대수 확대, 저상고속버스 신규 투입 등

▶ **시청각장애인에게 스마트 서비스 지원**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 연구 개발, 보급 (시청각장애인 73% '재난보도 사각지대')
-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점자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 **장애인 활동보조 앱 개발 지원**

▶ **장애계가 참여하는 서비스종합조사기준 마련**

▶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 체계적 지원**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 「뇌전증지원법(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우리 이웃 배려

#이웃 #왼손잡이 #세제지원

03 왼손잡이도 편안한 세상 왼손잡이 권익보호 위한 「왼손잡이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현재

▶ 전 세계적으로 성인 전체의 약 10% 정도가 왼손잡이지만, 대한민국 왼손잡이 비율은 전체 국민들 중 약 5% 정도(2013년 H사)로 낮게 조사

– 한국사회의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이전에 비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녀의 왼손 글쓰기, 밥먹기를 교정하려는 고정관념은 남아있고, 소수인 왼손잡이는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함

▶ 반면, 1976년부터 국제왼손잡이협회(Lefthanders International)는 8월 13일을 '왼손잡이의 날'로 지정하고, 왼손잡이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고충을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힘써 왼손잡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

약속

「왼손잡이기본법」 제정

▶ 왼손잡이 권익보호 위한 '(가칭) 왼손잡이기본법'을 제정

– 세계왼손잡이의 날처럼 8월 13일을 왼손잡이의 날로 지정

– 기초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왼손잡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왼손잡이 실태조사 및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에 대한 지원

– 왼손잡이 생산용품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왼손잡이용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실시

▶ 「왼손잡이기본법(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우리 이웃 배려

#일자리 #특수형태근로자 #가사종사자 #플랫폼고용자

04 현행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다수의 일하는 사람을 위해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 현행 「근로기준법」은 소위 '종속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4차 산업시대의 새로운 사업종사자들을 수용하는데 한계 존재

▶ 다양한 근로형태를 존중하고,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종사자, 플랫폼 고용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호 필요

약속

근로형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전제로 플랫폼 고용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을 위한 근거 및 제도 마련

▶ 「고용계약법(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우리 이웃 배려 #사회복지

05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현재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1%로 OECD 평균인 22%와 비교해 절반수준에 불과함.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필요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명시한 사회복지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시설과 사업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따라 임금격차가 심화

약속

사회복지예산 확대 및 사회복지사 급여 현실화

▶ **사회복지예산 확대**
- OECD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 사회복지시설 대상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한 임금가이드라인 개선
-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 제로화 등

내 삶을 디자인 하다

자유시장, 내 집 마련

◆3기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
◆재건축 · 재개발 규제완화로 양질의 주택공급 대폭 확대
◆용적률 확대 등 구도심 종합개발 추진
◆출 · 퇴근시간 교통 혼잡 개선
◆1인가구 · 청년 ·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마련
◆서민 · 중산층 내 집 마련 제도 지원
◆약탈적 부동산 증세 저지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로 관리비 비리 근절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책 마련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내 집 마련

#신도시 #부동산

01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무분별한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서울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여 30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 발표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핵심지역 부동산을 대체할 수 없어 서울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는 미미함

▶대규모 택지개발이 수도권 전체에서 동시다발로 추진되면서 현금으로 지급된 막대한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 주택 또는 지가가 급등하는 사회적 악순환 발생

약속

3기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
–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의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에 따른 '콘크리트 유령도시' 방지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용역 시행 후, 결과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조정 추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감면

▶원주민 재정착 지원 위한 생활안전대책 마련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재검토

▶「국토계획법(개)」, 「택지개발촉진법(개)」

02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현재

▶ 역대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폭압적 규제를 시행한 좌파정권에서 폭등
–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 21.7% 폭등, 오히려 이명박 · 박근혜 정부는 각각 –3.2%, 10.1%로 비교적 안정

▶ 문재인 정권은 서울 도심의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강제로 억제하며 공급부족을 가져와 부동산 시장 수급 불균형 초래

▶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며 안전성에도 무리가 있는 준공 후 4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 재개발까지 원천 봉쇄해 도심 슬럼화 가속 우려

약속

재건축 · 재개발 규제완화로 양질의 주택공급 대폭 확대

▶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직주근접 환경과 각종 교육 · 의료 · 교통 · 여가 · 편의시설 등 기존 도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
–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
– 안전진단 기준 항목 중 생활안전(내진설계, 상하수도, 가스, 환기, 소방 등 안전관계 시설의 노후도 및 사고에 대응하는 재난시설)의 비중 상향
– 특히 석면,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 이를 심의 기준에 반영토록 기준 신설

▶ 재건축 · 재개발 과정에서 각종 부담금 부과 등 페널티 중심의 정책에서, 단지를 주변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설계도입 시,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도입

▶ 기존 구도심 대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그룹별 또는 동별 디자인을 특화하도록 유도

▶ 노후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및 경제 진흥 등 종합적 재생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 추진

▶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만 줄어들어 로또 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 「도시정비법(개)」, 「건축법(개)」, 「주택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내 집 마련

#공중권
#용적률
#부동산

03 강남과 뉴욕을 뛰어넘는 한국판 '허드슨 야드'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 **용산 미군기지 반환으로 국가 공원화 사업진행**
- 용산역 인근 철도정비창 부지의 경우 국제업무지구로 개발 위해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난항을 겪으며 원점 회귀

▶ **문재인 정권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불투명한 집행문제 발생**
- 주민 공감 없이 공공의 일방적인 사업 주도로 오히려 지가상승 및 투기유발 등 부작용 초래

약속

용적률 확대 등 구도심 종합개발 추진

▶ **여의도 – 용산 –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종합개발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및 관광특구 구축**
- 기존 도심의 고밀도 · 고층화 콤팩트시티 전략 추진
- 대한민국 중심지에 광활한 녹지공간과 수준 높은 주택 공급
- 한류의 중심, 서울의 경제 · 문화적 국제경쟁력 강화

▶ **공중권 도입으로 상업지구의 파격적인 용적률 확대 (스카이라인 재설정)**
- 공중권 : 토지 및 건물 등의 상부공간에 대한 개발권리
- 핵심 상업지구는 용적률 상한 3,000%이상으로 완화, 일부지역 고도제한 해제 등 지역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 조정

▶ **용산 미군기지 부지의 '민족공원'이란 명칭의 사업이 편향된 특정 이념의 역사관이 투영된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고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도시재생사업 사업성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국토계획법(개)」, 「건축법(개)」, 「도시개발법(개)」, 「도시재생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내 집 마련

#교통
#대중교통
#신도시

04 지옥 같은 출·퇴근시간을 '내 삶의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권은 서울 주택가격을 해결한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교통대책 수립과 적기 공급에는 소홀

▶ 1·2기 신도시는 조성 당시 정부가 약속한 기업유치 등이 실패하면서 자족기능이 전무한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등 법·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도시 조성 시, 주민들과 약속한 교통대책은 심각하게 지연되어 오랫동안 교통지옥에 방치되고 있은 실정

약속

출·퇴근시간 교통 혼잡 개선

▶ 1·2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지지부진한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은 예비 타당성조사 인센티브 부여 등 조기공급

▶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진입 시, 가장 극심한 상습 정체 구간인 올림픽대로·강변북로의 대심도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

▶ 수도권 외곽에서 진입하는 서울도심 교통거점의 지하복합 환승센터 구축사업 신규 발굴 및 착공

▶ M버스 등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대폭확충 및 배차간격 단축

▶ 기존 신도시 지역 우선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도입

▶ 「광역교통법(개)」

05 1인가구·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주택 #신혼부부 #청년 #주택청약 #부동산 #주택대출

현재

▶ 1인가구 · 청년 · 신혼부부 주거문제 심각
- 청년 및 1인 가구(어르신 포함) 주거 빈곤율이 전체가구 대비 2배 심각
-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비 부담

▶ 문재인 정권에서 청년 · 신혼부부 주거정책을 추진 중이나 실효성 없음
- 젊은 세대들에게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있는 기회보다 임대주택 정책에만 집중하며 주거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상황

▶ 1인가구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은 현행 청약제도 하에서 각종 주택구입에 있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젊은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높은 85㎡이하의 경우 가점제 100%로 되어 있어 당첨이 원천불가 하도록 설계



약속

1인가구 · 청년 ·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마련

▶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 50% 실시
- 1인가구(어르신 포함)를 위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도입

▶ 청년주택 관련 각종 서비스 제공
- 무료컨설팅 서비스 (컨설팅 → 절차대행 → 입주 등 전 과정 서비스) 제공

▶ 신혼부부 전 · 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 상향
- 임차보증금 80%이내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 2억 → 3억원까지, 그 외 지역 1억 6천만원 → 2억원까지 상향

▶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거 공간 제공
- 기숙사형(임대), 원룸형 · 아파트형(임대 및 분양), 단독주택형(셰어형) 등
-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
- 민간 건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공급물량 확대 및 민간건설사 분양주택 수준으로 품질 향상과 가전 · 가구 빌트인 시공으로 부담완화

▶ 「주택법(개)」, 「건축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내 집 마련

#주택 #신혼부부 #청년 #주택대출 #주택청약 #부동산

06 '남의 집' 아닌 '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 ▶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규제는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와 기회를 빼앗아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체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한 폭압적인 시장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음
- ▶ 위헌적 관치금융 정책으로 주택대출을 옥죄어 서민 · 청년 ·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원천봉쇄하고 전 · 월세에 만족하거나, 사회주의식 공공임대 주택에서 영원히 살라고 등 떠밀고 있음
- ▶ 대출규제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내생애 첫 주택 마련계층들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9억 이하 주택중심으로 매수세에 나서며 풍선효과로 가격상승

약속

서민 · 중산층 내 집 마련 제도 지원

- ▶ 내 집 마련 꿈 가로막는 대출 기준 완화
  - – 상환능력 검증된다면 LTV(주택담보인증비율) 60%로 원상회복 (서울기준)
  - –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 –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하여 한정되도록 적용
- ▶ 계층세분화 통해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
  - – 청년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무주택자이나 고액전세 자산가, 소액 1가구 주택자 등 계층 세분화
  - – 주택 구입 시, 유사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
  - –고액전세 자산가, 토지부자의 경우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청약 혜택 제한
- ▶ 「주택법(개)」, 「주택도시기금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내 집 마련

#조세제도 #부동산

07 약탈에 준하는 '내 집 증세'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현재

- ▶ 문재인 정권은 세수 확보를 위해 내 집 가진 국민을 ATM으로 활용 중
  - – 최악의 경기침체로 7년 만에 세수입이 감소할 위기에도 정부는 적자 재정 편성
- ▶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와 중과세는 고가주택 9억을 기점으로 선명히 갈림
  - – 비상식적인 규제 남발과 이념 대결적 부동산 정책실패로 서울지역 9억 이상 가구 비중이 37.1%를 초과하여 9억 고가주택이란 말이 무색
- ▶ 정부는 각종 세금의 과세지표로 사용되는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변동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주택(시세 9억 초과)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우선 제고한다며 엄포

약속

약탈적 부동산 증세 저지

- ▶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 조정 추진
  - – 현행 시세 9억 초과 →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
- ▶ 입법을 통하지 않고 꼼수증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저지
- ▶ 규제지역의 자의적 지정 방지 및 해제조건 완화
- ▶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경우 상한특례 확대
- ▶ 「부동산공시법(개)」, 「주택법(개)」, 「지방세특례제한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내 집 마련

#아파트
#관리비부정방지

08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겠습니다

현재

▶ **현재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이 1000만 세대**
– 공동주택 관리비는 연간 20조원에 달하지만 눈먼 돈처럼 운영되어, 매년 관리비 비리가 고질적으로 발생

▶ **입주민의 무관심 등에 따라, 이권을 노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의해 필요한 공사나 용역도 부당하게 결정되는 경우 있음**
– 지자체에 관리비 비리 감사기능이 있지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비리 적발이 쉽지 않음

약속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로 관리비 비리 근절

▶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요청 기준을 완화**
– 입주자 1/10이상(현재 3/10)의 동의로 감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

▶ **모든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 공동주택 관리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

▶ **「공동주택관리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내 집 마련

#아파트
#층간소음해결

09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층간소음**
– 층간소음은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이웃 간의 불신과 다툼이 증폭되고, 폭력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

약속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책 마련

▶ **사후 층간소음 인정제도 도입**
– 사후 차단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자판정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 마련

▶ **층간소음과 관련한 부실시공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사의 책임 강화**
– 공동주택 시공사와 시행사가 시공절차 및 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층간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에게 피해보상하는 방안을 제도화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인정제도 개선**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단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각 단계별 구체적인 관리감독 지침을 마련

스포츠 활성화

◆생존수영 교육 강화
◆은퇴선수를 지원하여 스포츠 지도자 양성
◆체육 국가대표 지원 현실화
◆스포츠 종목 실업팀 발전
◆체육 꿈나무 해외국비유학 지원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스포츠 활성화

#어린이 #교육 #생존수영

01 생존 못 하는 생존수영 교육을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현재

▶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시행되고 있으나 수영교육 시간 및 수영장 시설 부족으로 간소화 운영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생존과 안전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질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못 함**
- 현재 생존수영 교육은 연간 평균 10시간 교육으로 위기상황에 실질적 대응 어려움
- 생존수영 교육을 이수하는 초등학생은 평균 58%이고, 자체 수영장 보유 초등학교는 전체의 1.1%에 불과

약속

생존수영 교육 강화

▶ **수박 겉핥기 식 현행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 수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
- 초등학생 대상 수영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초등 3·4학년 대상 '수영교육 집중 학년제' 실시

▶ **공공형 수영장 건립 확대를 통해 부족한 시설 확충**
-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학교 내 수영장 시설 확충
- 수영장형 개방형 국민체육센터 증설

▶ **수영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예산 지원 강화**
- 인근 민간 수영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수영 교육 예산 지원 확대

▶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초등학교 자체 수영장 건립 확대**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빈 교실 개·보수를 통한 수영장 건립 지원

▶ **「학교체육진흥법(개)」,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스포츠 활성화

#체육
#일자리
#은퇴선수

02 은퇴선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제2의 박항서'를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 **전문 체육인들의 제한된 진로와 불안정한 미래로 체육계의 위축이 심화**

▶ **은퇴 후 지도자로 진출하고 싶은 전문 체육인이 많지만, 지원 시스템이 없음**

– 학교 및 생활체육 스포츠팀 등 지도자를 필요하는 수요는 대부분 인맥으로 소개되기에, 연고가 없는 은퇴자는 지도자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

– 최근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성공으로, 국내 스포츠 지도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커지고 있음

약속

은퇴선수를 지원하여 스포츠 지도자 양성

▶ **스포츠팀 지도자 채용 플랫폼 설립 지원**

–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지도자가 필요한 스포츠팀과 지도자를 매칭하는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은퇴선수의 지도자 취업 증대

– 공공스포츠클럽 내 지도자 인건비 추가 지원하여 취업 기회 확대

▶ **국제전문 스포츠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

– 대학 등에 국제스포츠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설 지원

– 해외 스포츠 지도자 진출 시 원활한 활동을 위한 외교적 지원 시스템 마련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스포츠 활성화

#체육
#국가대표
#수당

03 '체육계 BTS' 국가대표 지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

현재

▶ **국가대표의 선수촌 강화훈련 시 낮은 선수 수당과 식비 등으로 훈련 의욕 저하**

–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진천선수촌의 경우에도 합숙 훈련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 미흡

▶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체육인 복지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250억 규모에 불과**

– 연간 기금조성액 1조 5,000억원 대비 1.6%에 불과, 대부분 메달리스트 연금으로 사용되고 있음

약속

체육 국가대표 지원 현실화

▶ **국가대표 수당을 현실화**

– 현재 최저임금에도 미치치 못하는 국가대표의 수당 6만5천원을 선수촌 합숙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인상

▶ **진천선수촌 등 국가대표 합숙기관의 생활 인프라 조성 지원**

▶ **국가대표 등 체육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의 체육인 복지 지원을 명문화**

▶ **「국민체육진흥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스포츠 활성화

#체육
#실업팀
#희망사다리

04 스포츠 종목 실업팀을 발전시켜 선수들을 위한 희망사다리를 만들고 국민의 호응도를 높이겠습니다.

현재

▶ 스포츠 실업팀들에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여 선수들의 안정적 훈련과 해당 종목의 발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관심과 인기가 저조

▶ 국민 인기스포츠 중 하나인 야구 역시 높은 국민적 인기에 비해 실업팀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선수들에게 희망사다리가 없고, 야구 발전도 미흡한 현실

약속

스포츠 종목 실업팀 발전

▶ 스포츠 실업팀 발전이 해당 종목 활성화와 지역 기반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

– 지자체와 연고가 있거나 지원을 받는 팀은 리그 휴식기에 지역주민이 선수들에게 해당 종목을 지도 받는 등 지역주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해 실업팀의 인기 높이고 발전 도모

– 실업팀 선수들의 은퇴 후 사회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1982년 프로야구리그 출범 이후 사라진 실업야구 부활과 발전을 지원

– 선수와 감독코치들의 진로의 선택을 넓히고, 저변 확대와 야구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실업야구가 프로야구 3부 리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스포츠 활성화

#체육
#교육
#국비유학

05 체육 꿈나무의 해외국비 유학을 지원하여 '제2의 손흥민'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 유소년 시기 해외의 선진화된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가 실제로 선수의 기량 상승으로 이어지나, 재능과 기회가 있지만 비용의 문제로 해외유학을 못 하는 선수가 많음

– 특히 비인기 종목인 경우 해외유학 투자를 더욱 꺼려, 국내에서 해당종목의 전체적인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 발생

약속

체육 꿈나무 해외국비유학 지원

▶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해외국비유학' 제도 신설

–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공정한 선발과정을 마련하고,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을 망라하여 재능있는 유소년 선수를 해당 종목 선진국에 유학 하도록 지원

▶ 해외국비유학을 마친 선수의 국내 리그와 국가대표로 의무 활동 기간을 규정하여 해외에서 쌓은 능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튼튼 건강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감염병 안심사회 조성
◆독감 등 국가예방접종 대폭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간호사 처우 개선하여 국민건강증진
◆흡연부스 환경개선 및 간접흡연 제로 추진
◆폐질환 발견·치료 국가지원 확대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튼튼 건강

#건강 #비만예방 #우울증예방 #건강검진 #거북목예방

01 거북목, 비만, 우울증 등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는 유아기의 영유아 건강검진, 청소년기의 학생건강검진(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포함), 성년기의 성인건강검진으로 나눠져 있음**

– 학생건강검진만 건강보험 공단이 아닌 학교장이 수행하고 있고 정보관리도 학교장이 담당하고 있어 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정보가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학생건강검진의 항목 또한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시대에 뒤떨어진 항목들로 구성

– 급격한 성장을 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간인 12년 동안 단 4회만 실시하고 있어 형식적인 건강검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큼

약속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 **학교 건강검진 항목을 시대에 맞는 질병코드에 맞게 개선**

– 거북목, 척추측만증, 비만, 우울증, 시력 등 청소년기에 취약한 질병들에 초점을 둔 건강 검진 실시

▶ **실시횟수 현재 4회에서 → 8회로 확대**

– 현재 12년 동안 단4회만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8회로 대폭 상향하여 입학 전 검진 및 매 2년마다 건강검진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개)」, 「학교보건법(개)」, 「건강검진기본법(개)」**

02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염병방지
#건강
#우한코로나19극복
#연말정산
#병원

현재

-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었지만 아직도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으로는 초기에 감염병 방역의 효과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
-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의 특성상 한번 확산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문화·산업·보육·교육 등 국민의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피해와 불편이 지속되어 경제적 손실도 큼
- 최근 우한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미비한 방역, 검역 시스템을 개선과 종합대책 마련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철저한 대응체계를 상시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음
- 개인위생은 습관이 중요한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강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 필요

약속

감염병 안심사회 조성

-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 **철저한 검역과 방역 관리로 감염병 확산 초기 차단**
  -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을 종합관리
  -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위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검역 인력 확충
- **감염병을 막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의 역할과 기능 강화**
- **의료기관 격리 및 여행정보력안내(ITS)설치 의무화**
  - 자가 격리하는 접촉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인근의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격리
  - 방역과 지역전파 차단을 위해 여행정보력안내(ITS) 설치 및 활용 확대
-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
-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
-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 세액공제안 마련**
  -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구입비 세액공제 실시
  -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중인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대상범위와 인원수 확대
- **유아기부터 개인위생 교육 강화**
  -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용품 사용 국민 캠페인을 실시
- **마스크 수급 종합 대책 마련**
  - 공적 마스크 유통과정의 투명한 공개
  - 지자체 주민센터, 통·반장의 세대 방문 등 행정망을 통한 공적 마스크 추진
  -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 및 운영 지원
  - MB 필터 안정적 수급 및 수입 다변화, MB 필터 대체재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의료진들을 위한 마스크·방호복 등 핵심 방호장비 최우선적 공급대책 마련
- **「정부조직법(개)」, 「출입국관리법(개)」, 「검역법(개)」, 「감염병예방법(개)」, 「조세특례제한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튼튼 건강

#건강
#예방접종

03 국가 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독감, 대상포진, 폐렴구균)

현재

- ▶ 독감 즉 인플루엔자는 일반 감기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질병이며, 지난해 약 720명이 독감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음
- ▶ 대상포진은 오래 방치하면 출산보다도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공포의 질병이라고 불림
  - – 면역력 약화가 발병의 주원인이라는 점에서 어르신들에게 특히 취약한 질환임에도, 고액의 접종비 부담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
- ▶ 폐렴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 사망원인 상위 3개 질병에 속하는 심각한 질환임

약속

독감 등 국가예방접종 대폭 확대

- ▶ 독감 국가예방접종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료 실시
  - – 독감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중학생 및 고등학생 모두 포함하여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서의 독감의 전파를 막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질병으로 인한 학업의 공백 사전 예방
- ▶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에 대상포진 포함
  - –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대표적 질병임에도, 고액의 접종비 때문에 부담 되었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
-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에 효과좋은 13가까지 포함하고 동네병의원에서도 접종가능하도록 개선
  - – 더욱 효과가 좋고 고가인 단백접합백신인 13가 백신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 예방 접종에 포함하고,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집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낮은 접종률 제고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튼튼 건강

#국민건강보험
#임플란트
#건강

04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4개까지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 ▶ 현재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건보적용 개수 확대에 대한 요구 증가
  - –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2018년 50%에서 30%로 낮아져 37만원 정도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지만,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백만원이 훨씬 넘은 시술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

- ▶ 치아연령은 개개인의 관리 여부, 유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신체연령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술횟수도 국민적 요구에 맞춰 확대 필요

약속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현재 2개에서 → 4개로 확대

-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제한 폐지
  - – 65세 미만도 40만원이면 임플란트 시술 가능



#건강
#간호사

05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현재

▶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건강 및 간호요구도가 증가**
- 간호대 정원이 최근 10년간 약 13,000명 증원되었으나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43.8%이고, 활동간호사 비율은 49.6%로 OECD의 하위권 수준

▶ **간호사의 의료기관 활동률은 20대에는 76.4%이나 40대에는 44%로 감소하여 경력단절 심화**
- 병원인력의 70% 이상은 여성으로, 임신·출산·육아로 상시 5~10% 결원되나 충원되지 않음

▶ **간호근무환경의 차이로 지역 간 간호사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형평성 저해**
- 인구 1천명 당 간호사수 : 평균 3.8명(최대 서울 4.9명, 최소 충남 2.5명)

▶ **대형병원의 대기간호사 확보로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및 고용 불완전 초래**

▶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선별진료소나 감염 병동을 유지하기 위해 타 병동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전문인력 부족 및 비상상태 장기화 시 교대근무자 확보 문제 등 발생**



약속

간호사 처우 개선하여 국민건강증진

▶ **최장 2년인 대기간호사제 개선**
- 신규간호사의 채용을 수시로 시행하여 간호인력 수급의 탄력적 운영
-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간호인력 교류·협력 체결을 통해 대기 인력의 중소병원 근무 및 복귀 제도 도입
- 채용 및 임용 대기 기간을 90일로 제한

▶ **보건복지부에 간호전담부서인 '간호정책과' 설치**
- 간호인력 종합계획 수립, 간호정책위원회 운영 등 시행

▶ **모성정원제 마련**
-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 외 임신·출산 간호사에 대한 별도 정원(5%) 마련
- 국공립병원에 단계적 시범사업 (2020년 2개소, 매년 10개소 증가 → 2024년 42개소 실현)

▶ **퇴직자 등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로 간호서비스의 질 보장**
-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지역별)에 공중보건위기 대비 이·퇴직 간호사DB 구축 및 교육, 공공인력으로 활용
- 퇴직 간호사 재고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 **감염병전문병원의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가능한 간호인력 확보**
- 감염병전문병원 선정기준에 간호등급 1등급을 포함하여, 비상인력으로서 교육·훈련 및 활용
- 선별진료소, 병동, 중환자실 등 별도의 간호인력 기준 수립

▶ **「의료법(개)」,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개)」, 「감염병예방법시행령(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튼튼 건강

#흡연자 #금연자 #담배 #건강

06 흡연자에게는 쾌적한 흡연을, 비흡연자에게는 담배연기 제로를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 정부는 작년 5월, 2025년까지 모든 실내흡연실을 없애겠다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함
- 정부의 막무가내식 실내흡연실 전면 폐쇄정책에 대해 국민은 흡연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길거리 흡연 등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와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더 크게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언론사가 진행한 흡연자, 비흡연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응답자 다수는 '공공장소의 금연·흡연 구역확대'가 필요하다고 대답함
- 정부의 일방적 금연정책이 흡연자들을 거리로 건물 뒤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은 아닌지 점검 필요

약속

흡연부스 환경개선 및 간접흡연 제로 추진

▶ 금연거리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하여 흡연공간을 찾지 못해 건물 주변에 숨어 담배를 피워야 하는 상황 개선
- 흡연부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장려, 흡연부스 내 흡연 유도

▶ 간접흡연 0%를 목표로 지하주차장 및 길거리 흡연을 전면 금지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

▶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 담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흡연자들의 금연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

▶ 「국민건강증진법(개)」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 튼튼 건강

#폐질환예방 #건강보험 #건강검진

07 폐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미세먼지나 담배연기로 발병·악화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 있는 심각한 질환이며 폐암은 국내 암사망률 1위 치명적인 질병

▶ 고령사회에서 질병구조가 만성질환화 되어가는 만큼, 폐건강 역시 평생건강차원에서 관리 필요

약속

폐질환 발견·치료 국가지원 확대

▶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포함하여 질환의 조기발견 유도

▶ 초기–만성–중증까지 전주기에 걸쳐 폐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 만성폐질환이 동네의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일차의료 교육·상담 사업 실시
- 중증폐질환에 대한 치료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 확대

▶ 폐암에 대한 지원 확대
- 국립암센터 폐암 관련 의료진 및 치료시설 대폭 확충해 전문성과 치료역량 제고
- 저소득층 폐암환자 등을 위한 암기금 신설 마련

미래통합당 사다리

국민의 희망사다리가 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늘 국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희망사다리는
국민에게 언제나
기회와 성공의 상징이었고
대한민국의 성장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혁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힘을 믿습니다.

[희망]을 위해 사다리를 오릅시다!
빈칸에 각자의 이름을 쓰고 게임을 즐겨보세요!



정책 찾아보기



ㄱ

가사종사자 205p
가업승계 31p
가족 173p, 172p, 174p
가축전염병 87p
가계부담완화 46p, 47p, 50p, 51p
간이과세 57p
간호사 131p, 232p,
감염병방지 167p, 228p,
거북목예방 227p
건강 195p, 197p, 198p, 227p, 228p, 230p, 231p, 232p, 234p
건강검진 89p, 197p, 227p, 235p
건강보험 235p
검찰개혁 99p
경력단절여성 189p
경제 30p, 31p, 32p, 33p, 34p, 35p, 36p, 39p, 41p, 42p, 53p, 54p, 56p
경찰 129p
기부 48p
기부금 77p, 78p
고용보험 73p
고용세습방지 179p
공기업 100p
공공외교 158p
공매도규제 53p
공수처폐지 99p
공권력 101p
공영방송 104p
공정거래 29p
공정거래위원회 29p, 101p
공중권 212p
공중화장실 169p
과학기술 70p
관광 81p, 184p
관광업 35p
관광청 35p
관리비부정방지 218p
교권 116p
교사 115p, 116p
교육 61p, 111p, 112p, 113p, 114p, 115p, 116p, 117p, 118p, 221p, 225p
교육감 114p
교장공모제저지 115p
교통 213p
교통사고방지 127p
국가대표 223p
국가장학금 117p
국가재정 32p, 36p, 45p
국가유공자 154p
국군포로 145p
국비유학 225p
국민건강보험 50p, 172p, 231p
국민연금 194p
국민행복카드 173p
국방 146p, 151p, 152p, 153p
국세청 101p
국정조사 103p
국제고 113p
군인 151p, 152p
군복무기간 151p
귀족노조저지 179p
규제개혁 29p, 31p, 39p, 40p, 41p, 42p, 43p, 54p, 59p, 62p, 64p
근로시간 42p, 59p
금연자 234p
급식 168p
권역외상센터 131p
금융 54p
금융감독원 101p
금융소비자보호 56p

ㄴ

낚시 91p
난임시술비 172p
납북자 145p
남북군사합의폐기 148p
남북협력 144p
남북협력기금 143p
노후 194p
농산물 88p, 137p
농업 182p
농촌 85p, 86p, 87p, 88p, 89p, 137p, 182p
농협 85p

ㄷ

다자녀 117p
담배 234p
대중교통 213p
대학 111p, 117p
대한노인회 193p
데이트폭력방지 187p
독점금지 29p
돌봄전담사 118p
동물병원 174p

ㅁ

미세먼지 65p, 132p, 133p, 134p, 135p, 136p
몰카범죄방지 187p
문화 69p, 82p, 106p, 183p, 184p

ㅂ

반려동물 174p
방송 43p, 104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5p
범죄예방디자인 128p
법인세 30p
벤처기업 59p, 60p, 61p, 62p, 63p, 64p, 66p, 67p, 68p, 181p
벤처캐피탈 62p
병원 131p, 228p
보육 167p, 168p, 199p
보훈 154p
부가가치세 57p
부동산 49p, 209p, 210p, 212p, 214p, 216p, 217p
북한 140p, 142p, 143p, 145p
북한이탈주민 201p
북한인권 142p
북핵폐기 144p, 146p, 147p
불공정방지 106p
비만예방 227p
비핵화 140p
빅데이터 133p



ㅅ

사회복지 206p
새마을금고 85p
새일센터 190p
생존수영 221p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33p, 180p
선거제 108p, 114p
선생님 116p
성범죄방지 106p, 171p, 187p
세제지원 32p, 189p, 204p
소방 129p, 130p
소방복합치유센터 129p
소상공인 57p, 73p, 74p
수능 111p
수당 83p, 90p, 154p, 223p
수산물 137p
수산업 90p, 91p
수협 85p, 90p
스마트밴드 196p
스타트업 181p
시니어클럽 193p
시도지사 114p
식품 137p
신도시 209p, 213p
신혼부부 214p, 216p
실업자 50p
실업팀 224p
실종아동방지 170p
4차산업혁명 59p, 60p, 61p, 62p, 63p, 64p, 65p, 66p, 67p, 68p, 69p, 70p



ㅇ

아파트 218p, 219p
ICT 68p, 133p
안보 139p, 140p, 141p, 142p, 146p, 147p, 148p, 153p
안전 127p, 128p, 130p, 131p, 132p, 187p, 188p
양육비 176p
어르신 46p, 89p, 193p, 194p, 195p, 196p, 197p, 198p, 199p
어린이 46p, 127p, 167p, 168p, 169p, 170p, 171p, 176p, 221p
어린이집 136p, 168p
어촌 85p, 86p, 89p, 90p, 91p
어촌계장 90p
AI 133p
여성 187p, 188p, 189p, 190p, 199p
여행 81p
연말정산 46p, 47p, 48p, 51p, 228p
영상 69p
영화 69p
엔젤투자 64p
예방접종 195p, 230p
예비군 152p
예비타당성조사 36p
예산 32p, 36p
예술 106p, 183p
외고 113p
외교 134p, 135p, 139p, 141p, 157p, 159p
왼손잡이 204p
용적률 212p
우울증예방 227p
우한코로나19극복 74p, 167p, 159p, 228p
위험수당 129p
원전 40p, 65p, 102p
유기견 174p
유연근로제 42p
유치원 136p
은퇴자 50p
은퇴선수 222p
은행 54p, 56p
응급의료센터 131p
이산가족 145p
이웃 201p, 202p, 204p
인구소멸방지 77p

인헌고사태 112p
인사청문회 100p
인터넷은행 54p
1인가구 128p, 188p
일자리 30p, 32p, 33p, 67p, 118p, 180p, 181p, 182p, 183p, 189p, 190p, 193p, 199p, 205p, 222p
임산부 173p
임플란트 231p
입시 111p
의사 131p

ㅈ

자연재해대책 88p
자사고 113p
자영업 57p, 73p, 74p
자영업자 50p
장애인 196p, 202p
재개발 210p
재건축 210p
재난 88p, 132p
재도전 60p
재외국민 157p
저출산 172p
전시작전통제권 147p
정시 111p
정치편향교육저지 112p
주민자치 80p
주식 53p, 55p
주택 210p, 214p, 216p
주택대출 214p, 216p
주택청약 214p, 216p
준연동형선거제폐기 108p
중소기업 74p
지방교부세 78p
지방선거 114p
지방자치 79p, 80p, 83p
지소미아 141p
지역관광 35p
지역균형발전 77p, 78p, 79p, 81p, 82p
직불금 86p
직불제 91p
증권거래세 55p
조세제도 30p, 31p, 45p, 46p, 47p, 48p, 49p, 55p, 57p, 85p, 90p, 91p, 217p

ㅊ

창업 59p, 60p, 61p, 63p, 66p, 67p
참전유공자 154p
채용청탁저지 179p
청년 68p, 179p, 180p, 181p, 182p, 183p, 184p, 214p, 216p
체육 82p, 106p, 107p, 184p, 198p, 222p, 223p, 224p, 225p
체육회 107p
최저임금 41p, 180p
축산물 87p, 137p
친환경 65p
층간소음해결 219p

ㅋ

콘텐츠 69p

ㅌ

탄력근로제 42p
탈원전정책폐기 65p, 102p, 103p, 133p
태양광게이트 103p
통신비 51p
투자 30p, 32p, 53p, 55p
특검 103p
특목고 113p
특별감찰반 101p
특수형태근로자 205p
TAC 91p

ㅍ

파이로프로세싱 40p
편파방송방지 104p, 105p
폐질환예방 235p
플랫폼고용자 205p

ㅎ

학교 118p, 136p
한미동맹 139p, 147p
화재예방 130p
환경 134p, 135p, 136p
히든챔피언 66p
해외원조 158p
해운업 34p
해양진흥공사 34p
해킹방지 153p
희망사다리 111p, 224p
행정규제 39p
행정조사 101p
흡연자 234p



